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1950 년대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파동 연구

An Analysis on the Hangeul Simplification Policy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in the 1950s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대위

1950 년대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파동 연구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대위

대위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2 월

위원장 황선엽 (인)

부위원장 한정훈 (인)

위원 박태균 (인)

논문초록

본 논문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파동에 대한 연구이다. 이승만 정권 시기의 한글간소화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기한 맞춤법 개정으로 인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맞춤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국민의 언어 생활은 물론, 전 사회에 큰 불편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면 일단 한글 맞춤법 표기의 정립과정부터 알아야 한다. 철자법에 관한 표음주의 및 형태주의의 논쟁은 한반도에서 계속 존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기로 하여 많은 시도를 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일제가 의도했던 어문 통제의 일환일 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어학회가 국어 통일을 위해 국어 운동에 나섰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국어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은 민족정신을 품는 대표적인 문화단체가 되었다. 조선어학회에 의해 제정된 <통일안>(1933)은 반식민통치투쟁과 민족독립운동의 성과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방 후 자연스레 과학적인 철자법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1948년 10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으로 한글간소화파동의 서막을 예고했다. 남북전쟁이 잠잠해지고 1953년 4월 27일 백두진 국무총리가 총리 제8호령을 발표하여 온 나라에 큰 반

향을 불러 일으켰다. 해외에 오래 머무는 이승만이 익숙한 맞춤법은 당시 기준으로 50년 전의 구성경식 맞춤법이고 국내에서 보급된 1933년 <통일안>에 잘 쓰지 못했다. 이승만이 추진하려고 한 <한글간소화 방안>은 바로 50년 전의 맞춤법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통일안>(1933)은 이미 국내 공교육을 통하여 점차 정착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내린 한글 간소화 지시는 전 국민의 언어생활, 문자 생활에 많은 혼란상을 야기시켰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은 정치 파동으로도 이어졌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 국회, 학술원 공동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안의 영향으로 간소화 방안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그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언어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항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작업은 완성했다. 이런 시스템은 민주적 절차를 밟고, 전문성 지니는 학자 그룹인 학술원의 참여도 있어서 공인되었다. 결국 1955년 이승만이 담화로 한글간소화파동 사건 종료를 공식 선포했다.

연구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국어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만든 이유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체제에 있어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 우월성 경쟁 및 그의 정책 결정과정의 일방성이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간소화 방안을 강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안은 역(逆)근대화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이승만, 한글, 표기법, 어문정책, 형태주의, 표음주의, 반공정책

학번: 2018-22059

목차

1 장 서론

1. 논문의 목적.....1

2. 기존 연구 분석.....5

3. 논문의 범위와 방법론.....7

2 장 한글 맞춤법 표기의 정립과정

1. 근대 이전.....9

2. 일제강점기 맞춤법 규정 시도.....10

3. 조선어학회의 노력.....15

3 장 한글 간소화 파동

1. 한국전쟁 이전 한글 간소화 논의의 기원.....21

2. 1953-1955 년 한글 간소화 파동.....24

3. 한글 간소화의 실패.....49

4 장 한글 간소화 정책의 정치성

1. 반공정책 53

2. 정책 결정과정의 일방성 문제 62

5 장 결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6

제 1 장 서론

제 1 절 논문의 목적

언어는 도구와 문화 이 두 기능을 겸비하고 있고, 도구 기능은 일상 소통 및 사상에 사용되며, 문화 기능은 문화 전승과 신분 정체성 구축에 사용된다. 언어 정책은 국가 거시행정행위로 언어 도구 기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언어의 문화 기능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당대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됐으며, 국가 법체계에 언어 정책을 포함시켜 언어 입법을 통한 언어 정책의 법적 보장도 많았다.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한국어 맞춤법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4-39 호에 따라 쓰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70 년부터 본격적인 한글 맞춤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여 거의 17 년에 걸쳐 작업을 했다. 1933 년에 민간 기구인 조선어 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내용 중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을 삭제하고, 미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며, 현실에 뒤떨어진 일부 규정을 바꾸고 난 뒤, 1988 년 1 월 19 일 한글맞춤법을 고시, 또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1989 년 3 월부터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을 시행하였다. 이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은 2014 년 12 월에 개정되고 2015 년 1 월 1 일부터 한글 맞춤법이 시행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다.

1446 년 '훈민정음'이 반포됨으로 한글은 창제되었다. 하지만 한글이 '언문'이나 '암글' 등으로 불리며 수백년 동안 냉대를 받았다. 1894 년은 갑오개혁이라는 근대적 대개혁이 단행된 때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한글

을 '국문'[1]이라고 하여 한글의 위상은 드디어 강화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약 450 년 뒤에 한글이 한국의 공식 문자가 된다. 1910 년 나라를 잃은 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교육을 목적으로 언어의 표준화를 하기 위 하여 1912 년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1921 년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 1930 년 '언문 철자법' 등이 식민지 시대의 한글맞춤법으로써 제정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맞춤법과는 별도로 1921 년에 창립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는 국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족운동으로서 조선의 철자법 · 표준어 · 외래어표기의 통일 및 사전편찬 등 사업을 성취했다. 1945 년 광복 이후, 조선어학회가 국어운동의 주체로써 활동하기 시작했고 한국 국민들의 한글 공부 열풍을 타며 한글 맞춤법통일안을 발간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언어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격동되었다. 그 사건이 바로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한글간소화파동'이다.

정부 수립 직후, 1948 년 10 월 9 일 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날 담화를 진행했다. 그 담화문 내용에서 '간소화 파동'의 씨앗이 이미 들어있었다.

"이 글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니 이 점에 깊이 재고를 요하여 여러 가지로 교정을 하여서 우리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2]

---

[1] "제 14 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으로 혼동한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2 권, 고종 31 년 11 월 21 일 계사 2 번째기사.

[2] "한글날을 맞이하여"(1948.10.09),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p271, 공보실 편, 1953

이 메시지는 별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승만은 이듬해 한글날 담화에서 또 비슷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근래에 이르러 신문 게재나 다른 문화 사회에서 정식 국문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이전 것을 개량하는 대신, 도리어 쓰기도 더디고 보기도 괴상하게 만들어놓아 퇴보된 글을 통용하게 되었으니, 이때에 이것을 교정하지 못하면 얼마 후에는 그 습관이 더욱 굳어져서 고치기 극난할 것이매 모든 언론기관과 문화계에서 특별히 주의하여 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3]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문제를 제시만 한 채로 몇 년 동안 다시금 한글문제에 대해서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1953 년에 이 문제를 꺼내놓고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4 월 27 일 백두진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과 각 도 지사에게 보낸 훈령으로부터 한글 간소화 파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다.

1949 년 10 월 9 일 이승만 대통령이 제기한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한글 표기법안, 간소화 3 개조와 용례, 부록 등을 실은 <한글 간소화 방안(원칙, 이익편)>을 1954 년 6 월 9 일 성안(成案)하고, 7 월 2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회 전체가 이 한글 간소화 방안으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학계 등의 반발이 심하자 1954 년 7 월 9 일 이승만 정부가 『한글 간소화 방안(이유편)』을 다시 펴냈다. 한글 간소화 방안이 공

[3] "한글사용에 관하여" (1949.10.09)

포되었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와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다. 1955 년 9 월 19 일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로 한글 간소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글 간소화 파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현행 철자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행정의 힘에 의존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그의 시도는 진일보하게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한글 간소화 파동 사건은 1953 년 4 월부터 1955 년 9 월까지 2 년여 만에 마침내 이승만이 법안 철회 담화로 끝났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통일안을 폐기하고 한글간소화 방안으로 구 성경 철자법을 쓴다면 지금 한국의 언어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한국 전 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 '한글간소화파동'은 맞춤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국민의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성격을 갖추는 사건이다. 한국과 북한의 미래를 고려하면 한글간소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쌍방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근래의 한국 언어 사용 현황을 고려하면 유사한 파문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문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2 절 기존 연구 분석

그 동안의 이승만 정권 시기의 한글간소화파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김민수(1973)는 <국어정책론>에서 한글파동의 성격을 '명분론과 방법론 및 이론 논쟁'으로 규정하고, 명분과 방법의 문제보다는 사건 발생의 본질로써 표의주의 대 표음주의의 이론 논쟁을 중시하였다.[4]

신상건(1980)은 <해방이후의 어문정책 고찰 - 문자 및 정서법 중심으로>에서 국어 정책사를 정리한 논저 등에서 간단히 한글파동에 대해 서술했다. [5]

오영섭(2003)은 <1950 년대 전반 한글파동의 전개와 성격>에서 한글간소화파동에 대한 역사학 분야의 독자적인 연구를 했다. 한글간소화파동을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대결, 문자파동・문화파동・정치파동의 복합체,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운동, 일제강점기에 어문민족주의운동을 주도한 한글 학회 세력의 정통성 확보 투쟁, 이승만의 제왕 정치 영속화 시도 등 다양한 국면으로 분석하고, 간소화 정책의 좌절이 곧 이승만 정권 몰락의 전조였다고 평가하였다.[6]

이혜령(2007)은 "언어 내셔널리즘" 시각으로 입각하여 국가가 합법 국민

---

[4] 김민수(1973),『 國語政策論(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5] 신상건(1980),『해방이후의 어문정책 고찰 - 문자 및 정서법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15: 1. p 12-14.

[6] 오영섭(2003), 『1950 년대 전반 한글파동의 전개와 성격』, 사학연구 72 (2003): 133-74.

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글간소화파동을 통하여 다시 언어 문제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사건으로 평가를 했다. 한글간소화 방안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 국가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언어 내셔널리즘의 실정화가 국민 형성을 위한 전제이자 과정과 결과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7]

정재환(2006)은 한글간소화파동의 전모를 고찰하며 특히 기독교계의 대응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당시 한글간소화파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물론, 한글파동의 의미도 선명해졌다. 한글간소화파동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의 필요를 남겼다고 밝혔다.[8] 7 년 후에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이 책에서 해방 후 10 년간 한글학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동시에 뒤쪽에서 남한의 '한글맞춤법 간소화 파동'을 다루었다. 정재환은 식민지시대에 민간-학계의 민족운동으로 추진되던 <큰사전> 편찬 사업은 건국 후에도 한글학회의 민간사업으로 계속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간소화 파동으로 지체시키기까지 했음을 지적한다.[9]

기존 연구를 연구하면서 필자가 몇 가지 질문을 생기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어학자도 아니면서 왜 한글 간소화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왜

---

[7] 이혜령(2007), 『언어 법제화의 내셔널리즘—1950 년대 한글간소화파동 一考』, 대동문화연구 12.58 (2007): 183-224.

[8] 정재환(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9]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 : 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서울:景仁文化社, 2013

처음에 1948 년에 씨앗이 들어 있었던 '간소화 파동'이 무력 5 년 뒤에 1953 년에 당시의 국무총리가 보낸 훈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는지, 왜 1955 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로 한글간소화 방안을 폐기하기로 했는지, 왜 강권주의 노선인 이승만 정부는 이 문자 개혁을 강행하지 못 했는지 등 몇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아쉽게도 이런 질문의 답을 선행연구에서 찾기 어렵거나 제가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젊은 세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들을 보면 철자법을 훼손시키고 발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보여 오히려 한글간소화 방안으로 사용한 것 같다. 한글간소화파동이 1950 년대에 이미 끝난 사건인지라도 과연 남아있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인지, 현재와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은 이승만 정권 시기의 한글간소화 파동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주로 기존 연구검토 및 역사자료분석 등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 장이다. 1 장은 서론이다. 2 장에서 한글 맞춤법 표기의 정립 과정을 다룰 것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어학회에 의해 제정된 <통일안>(1933)이 자연스레 과학적인 철자법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연구해봤다. 3 장은 상세하게 이승만 정권 시기의 한글간소화파동의 전개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한국 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이 1948 년, 1949 년 누차 담화를 통해 현행 철자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

구했다. 한국 전쟁이 잠잠해지면서 1953 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한글간소화 방안으로 학술단체, 국회 등 전 사회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1955 년 9 월에 이승만의 담화로 한글간소화사건이 해소되었다. 4 장은 이승만이 한글간소화파동을 일으킨 뒤에 서 있는 정치성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인데 이승만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노선은 이 문제에서 작용했다고 분석할 것이다. 5 장은 결론 부분이다.

당시 사건의 전개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1948 년부터 1955 년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실린 관련 기사를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를 활용하였다. 한글학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글학회 50 년사>, <국어국문학회 30 년사>, <한글> 잡지에 실은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 등을 참조하였다. 그 밖에도 한글간소화파동에 관한 연구, 이승만에 관한 연구, 박용만, 최기일 등의 회고록, 북한 어문 정책에 관한 연구, 김두봉과 이극로에 관한 연구, 중국문자개혁에 관한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제 2 장 한글 맞춤법 표기의 정립 과정

제 1 절 근대 이전

1446 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한글이 창세이후에도 한글 철자법에 대한 규범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 훈민정음이 존재하지만, 조선에서는 한자를 문어로 사용했다. 1876 년 개항 이후, 조선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민족어에 대한 의식도 갖게 되었다. 19 세기 말기, 갑오개혁의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훈민정음을 "국어"로 규정한다. 1894 년 11 월 21 일 칙령 제 1 호 공문식(公文式) 제 14 조 및 1895 년 5 월 8 일 칙령 제 86 호 공문식 제 9 조에서 법령을 모두 국문을 바탕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을 국어로 만들기 위하여 언어 규범화 작업이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자법의 통일 및 정리 작업 등도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역시 언어 정책을 통제한 것이다.

근대에 들어 대한제국도 세계의 추세에 따라 근대화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해봤다. 철도, 기계 등 사물의 혁신 등과 함께, 어문의 근대화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어문의 근대화란 바로 표준화였다. 언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 나라의 문명 발전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런 입장으로 한글 운동의 주체들이 끊임없이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주장했다.[10] 철자법 통일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1910 년 조선이 식민지가

[10] 이혜령,(2004),『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47 (2004), p254.

되면서 철자법 작업도 일시 중단되었다. 1905 년, 법령으로 <신정국문(新訂國文)>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대한제국 시대의 국정서법 시안이었다.[11] 하지만 <신정국문(新訂國文)> 은 닿소리는 “ㅿ”과 “ㆆ”을 없애고 14 자로 하자는 것,홀소리는 “ㆍ” 자를 없애고 “ㅡㅣ” 라는 새 글자를 만들자는 것, 된소리는 쌍서(ㄲ·ㄸ·ㅃ)로 표기하자는 것[12] 등 논쟁점이 된 내용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실시되지 못했다. 1907 년 7 월, 국문 표기법에 관한 재검토 및 통일의 필요에 있어서,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역시 국가 주관의 국문연구기관이다. 2 년의 시간을 거듭하여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연구 의견을 종합하여 내각에 <국문연구의정안>을 상정하였다.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이 결국 실제로 정책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1930 년대의 철자법 개혁은 바로 그 안에서 채택된 형태주의 원칙인 표기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13]

제 2 절 일제강점기 맞춤법 규정 시도

근대에 들어 대한제국도 세계의 추세에 따라 근대화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해봤다. 철도, 기계 등 사물의 혁신 등과 함께, 어문의 근대화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어문의 근대화란 바로 표준화였다. 언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 나라의 문명 발전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입장

---

[11]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p326

[12] 『신정국문(新訂國文)』,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p328

으로 한글 운동의 주체들이 끊임없이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주장했다.[14] 철자법 통일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1910 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철자법 작업도 일시 중단되었다. 1905 년, 법령으로 <신정국문(新訂國文)>은 공포되었다. 이것은 대한제국 시대의 국정서법 시안이었다.[15] 하지만 <신정국문(新訂國文)> 은 닿소리는 "ㅿ"과 "ㆁ"을 없애고 14 자로 하자는 것, 홀소리는 "ㆍ" 자를 없애고 "ㅡㅣ" 라는 새 글자를 만들자는 것, 된소리는 쌍서(ㄲ·ㄸ·ㅃ)로 표기하자는 것[16] 등 논쟁점이 된 내용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실시되지 못했다. 1907 년 7 월, 국문 표기법에 관한 재검토 및 통일의 필요에 있어서,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 역시 국가 주관의 국문연구기관이다. 2 년의 시간을 거듭하여 국문 연구소 위원들의 연구 의견을 종합하였고 내각에 <국문연구의정안>을 상정하였다.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이 결국 실제로 정책 실현이 안 되었지만 1930 년대의 철자법 개혁은 바로 그 안에서 채택된 형태주의 원칙인 표기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17]

일제 통치 하에 어문 정책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관한 것이다. 한일병합 후, 총독부에서 보통학교용 한국어 교과서에 사용하는 한글 철자법을 정리하기 위하여 철자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총독부 시기 안에, 1912 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 반포를 시작으로, 1921 년

---

[14] 이혜령,(2004),『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47 (2004), p254.

[15]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p326

[16] 『신정국문(新訂國文)』,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p328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大要)>과 1930 년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을 다시 수정하여 확정되었다.

1912 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발음대로 쓰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다. 주요내용은 현대 경성어(서울 방언)를 표준으로 하되 '·'를 폐지하고, 한 글자 받침 'ㄱ, ㄴ, ㄹ, ㅁ, ㅂ, ㅅ, ㅇ'과 두 글자 받침 'ㄺ, ㄼ, ㄽ' 열 가지만을 사용한다.[18] 이 안은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을 부정하여 어의와 어형을 고려하지 않은 표음주의로 복귀한 것이다. 1912 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19 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성경 번역을 위해 개정한 한글 표기법을 약간 개정한 것이다.[19] 이승만이 주장했던 <한글간소화 방안>은 바로 1912 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과 비슷하다. 1921 년에 개정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에서 표음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하며 받침 글자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일곱 가지만 인정한다.[20] 하지만 1930 년에 확정된 <언문철자법>은 형태주의적 표기법 도입과 함께 1921 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에 비해 받침 글자로는 'ㄷ, ㅌ, ㅈ, ㅊ, ㅍ'를 받침으로써 사용하는 것도 인정하며, 또한 'ㄲ, ㄳ, ㅄ, ㄵ, ㄾ, ㅍ, ㄺ, ㄼ, ㄽ' 등 두 글자 받침도 사용한다.[21] 이로써 한글 표기법은 다시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에서 채택한 형태주의로 복귀하였다.

---

[18] 朝鮮總督府, (1912),『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 歷代韓國文法大系,第 3 部,第 8 冊,博而精

[19] Ross King, (2004),『Western Protestant Missionaries and the Origins of Korean Language Modern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1.3 (2004),p30.

[20] 朝鮮總督府, (1921),『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大要』, 歷代韓國文法大系,第 3 部,第 8 冊,博而精

[21] 朝鮮總督府, (1930),『諺文綴字法』, 歷代韓國文法大系,第 3 部,第 8 冊,博而精

이런 변화의 원인은 일단 참여 위원들의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참여 위원들은 주로 조선어 교육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연구자, 교원 및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위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

	1912	1921	1930
통역관, 관리	3 명(國分象太郎·鹽川一太郎·新庄順貞)	4 명(田中德太郎·藤波義貞·申基德·玄櫶)	4 명(西村眞太郎·田中德太郎·藤派義貞·田島泰秀)
연구자(위원, 교수)	3 명(玄檃·魚允迪· 高橋亨)	5 명(金澤庄三郎·魚允迪·柳苾根·池錫永·玄檃)	5 명(申明均·李完應·高橋亨·小倉進平·崔鉉培)
현직 교원, 언론인	2 명(姜華錫·俞吉濬)	2 명(權悳奎·崔斗善)	8 人(權悳奎·朴勝斗·朴永斌·沈宜麟·李世楨·鄭烈模·金尙會·張志暎)

1912 년 <언문철자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일본인 3 명과 유길준, 현은, 어윤적 등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유길준은 “일제 시대의 토착 엘리트(친일

[22] 송미영,(2019),『어문 규범으로 보는 음운 현상의 표기 반영 양상』,어문연구,47.2 (2019): 47,p50.

파)”[23]라는 후세의 비판을 받은 인물이고 현은과 어윤적은 친일파 708 인 명단[24]에 수록되었다. 1930 년 개정 과정에서 형태주의를 주장하여 국문연구소 위원이었던 주시경의 학파를 승계한 최현배(崔鉉培), 신명균(申明均), 장지영(張志暎), 정열모(鄭烈模) 등 참여하여 심의했다.[25]

이렇게 일제에 의하여 제정된 표기법 원칙도 <의정안>에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었고, 조선민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런 표기법의 제정은 결국 일제가 의도했던 어문 통제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26] 그 표기법이 지니는 한계점과 진실한 가치는 의심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에서 정한 철자법에 대한 불만의 정서가 점점 쌓이다가 주시경 학통을 계승한 형태주의 철자법을 지지하는 제자들이 1921 년에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였다. 당국의 철자법과 다른 조선어연구회에서 제안한 철자법은 언론매체에 사용되면서 총독부에서 정한 철자법은 사회의 실제적인 사용 상황과 맞지 않았다.[27] 조선총독부는 이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다시금 철자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1928 년 9 월부터 2 차 심의회를 거쳐 1930 년 2 월에 드디어 확정한 것은 「언문철자법」이다.

---

[23] 박노자,(2004),『계몽주의자, 군국주의자!』,한겨레 21(제 502 호) 2004.04.01

[24] 친일파 708 인 명단(親日派708人名單)은 2002 년 2 월 28 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주요 친일 인사 708 명에 관한 명단이다. 이들 명단은 1948 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25]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p331.

[26] 이상혁,(2013),『<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권 1 과 <언문철자법>(1912)- 조선어 학습 방침과 규범 통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 호,p150.

[27] 김윤경,(1933),『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18): 최근의 한글운동』, 동광 (40 호)

제 3 절 조선어학회의 노력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의 핵심은 동화정책에 있어서 식민지배 초기에 양어동원론(兩語同源論)을 많이 활용하였다.[28] 조선어가 일본어의 방어인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어 교육을 일본어 교육에 활용하여 일본어 교육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조선어연구회를 비롯한 많은 민간 조선 언어학자들은 민족어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선총독은 조선연구회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민족어 통일운동의 조선 민족주의 색깔을 씻고자 해서 조선연구회 학자들을 <언문철자법> 개정 위원들로 수용한 것이다.[29]

1931 년,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어 연구 · 통일 사업을 추진하였다. 권덕규, 김윤경, 이병기, 이윤재, 장지영, 최현배, 정열모, 이극로 등 18 인의 제정 위원이 중심이 되고 3 년에 걸쳐 1933 년 10 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30]은 반포되었다. 조선어학

---

[28]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정책에 참여했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등의 주장도 '양어동원론'에 근거했다. 임동현(2014).『1930 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2014):p437 참조.

[29] 임동현(2014). 『1930 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2014):p439.

[30] 1933 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과 1930 년 <언문철자법>은 다 형태주의라는 큰 틀에 속하여 차이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다. <언문철자법>과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930 <언문철자법>	1933<한글 맞춤법 통일안>
사이시옷	장ㅅ군	장군

회의 통일안은 일부 반대 소리도 당면했지만 주류 지식인들의 승인 및 지지를 얻었고 일반 대중들의 호응도 확보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항상 조선어학회의 민족주의적 언어 운동 움직임을 경계하여 새로 고친 <통일안>은 교과서에 사용되는 <언문철자법>에 반영되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시 주류 조선 미디어(신문, 소설, 잡지, 단행본)에서 <통일안>도 널리 사용되었다. [31]

그리고 이 시기에 주시경 학통의 조선어학회에서 정해진 형태주의 철자법은 주류였지만 조선에서 유일한 학파가 아닌 것을 유의해야 한다. 193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언어학자 단체가 또 하나 존재했다. 바로 언어학 주장에 있어 주시경 학파와 날카롭게 맞서는 박승빈(朴勝彬)이 조직한 조선어학연구회이다.[32] 이 회는 조선어학회와 똑같은 언어·문자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민족정신을 내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와서

새 받침	11 개 추가(ㄷㅌㅈㅊㅍㄲㄳㄵㄾㄿㅀㅄ)	18 개 추가 (ㄷㅈㅊㅋㅌㅍㅎㄲㅆㄳㄵㄶㄺㄾㄿㅀㅄ ㅁㄱ)
구개음화	숯,숯테/밭,밭치	숯,숯에/밭,밭이
어미 변이	되여서,가저서	되어서,가져서
ㄷ 받침	물엇소. 뭇다.	물었소. 묻다.
준ㅎ	그러타	그러ㅎ다
장음표시	표기하지않음	자전에만 씀

[31] 『조선어학회: 조선의 말과 글을 통일하라』, 우리역사넷 ,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3300&code=kc_age_40

[32] 1931 년 박승빈(朴勝彬)이 국어학의 연구와 한글맞춤법의 정리를 목적으로 조선어학연구회를 조직하였다.

활동한 단체이지만, 조선어학연구회는 표음주의 맞춤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통일안>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

즉,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언어 정책의 담당자였다. 일제 시기는 조선 어문이 많이 위축된 시기였지만 철자법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보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통일안 맞춤법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지만, 뜨거운 맞춤법에 관한 논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명확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표음주의 학파 학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다. 조선어연구회의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철자법을 보급했지만, 이 시기의 조선어연구회는 정책적인 발언권이나 결정권은 부여되지 못했다.

1937 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 시기로 접어든 후, 조선인들을 병력자원화하는 기초작업에 있었다[33]는 계산에서 일본이 더욱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황국신민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조선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언어는 의사 전달의 도구이자, 사상의 구현이자, 더불어 민족의 상징이다. 따라서 조선어를 조선사람 민족주의 사상의 토대라고 여긴 일본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선인들의 모국어 공부를 막고자 하였다. 1938 년 3 월 칙령 제 103 호로 제 3 차 '조선교육령'이 개정 및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어 수업은 예전의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떨어지면서 수업시간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학교 규정>(쇼와 13(1938)년 3 월 15 일 조선총독부령 제 24 호) 제 38 조는 "학교장은 소학교에서 교수해야 하는 각 교과

[33] ＜國民教育ニ關スル方策(1937 년 6 월)＞(≪舊陸海軍文書(別冊 三)≫No. 678).

목의 교수세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전부 일본 사람인 사실을 파악한다면 많은 공립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수업과 교과서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며 수업 간의 휴식 시간 및 일상에서의 조선어마저도 금지되었다. 학생들이 조선어를 쓰는 것이 발견되면 체벌, 감점, 혹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기 일쑤였다. 더 나아가 일제는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등의 행동에 대해 극단적으로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은 외부로부터 조선인에게 강압된 민족성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이었고, 조선 사람들이 민족 말살 위기를 당면하고 있었다.

조선어학회는 항상 민족어, 민족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1933 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후에, 1936 년 <표준어사정>, 1940 년 <외래어표기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런 기초 작업을 완성한 후,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사전 작업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보다 깊은 단계로 진행시키는 바람에 조선어학회의 작업도 역시 일제의 진압을 당하였다. 1942 년 8 월, 일본 이동경찰이 학생을 조사했을 때 일부러 조선어학회 구성원의 교사를 연루하였고, 그 다음에 학회에 파문을 미치게 하였다. 1942 년 10 월, 일제가 조선어학회의 회원 31 명을 총점검하고 사전 원고를 빼앗아 갔다.[34] 그 후 일제가 학회 학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을 치안유지법등의 위반을 죄명으로 검거하고 말았다. 이

[34] 전택부,(2008) 『[다시 보는 새가정] 일제탄압과 한글의 투쟁 - 조선어학회 사건』, 새가정 (2008). p25.

사건은 바로 일개 당국이 고의적으로 만든 “조선어학회사건”이다.[35]

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은 민족정신을 품는 대표적인 문화단체가 되었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극도로 수난을 당한 독립운동가로 인식되었다.[36] 조선어학회가 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실로 조선 민족정신의 영예로운 기상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일제가 민족어,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말살이라는 의도에서 저항의 정점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통일안>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투쟁 정신의 결정체로 삼게 되었다.

8·15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가 1933 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자연스럽게 수용되었고[37] <통일안>이 당시 정서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38] 조선어학회의 주요 회원들 중 정부기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교

---

[35] 1943 년 3 월 말경까지 29 명이 검거되었다. 대체로 1 년간 홍원(洪原)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온갖 야만적 악형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 명이 취조를 받았다. 1943 년 12 월 이윤재가, 이듬해 2 월에 한징이 각각 심한 고문과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옥사(獄死)하였다. 정태진만은 복역(2 년)함이 더 빠르겠다고 하여 복역을 마쳤고, 장현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다른 사람은 1945 년 광복을 맞이하여 8 월 17 일 부 석방되었. 이 사건으로 어학회가 해산되고, 사전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으로 옮겨다니다가 여러 부분의 원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광복후 1945 년 9 월 서울역 창고에서 일제가 잃어버린 원고가 발견되어 추후 한글 대사전이 출판되었다.

[36] 장신(2016),『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과 민족서사의 탄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53 (2016): p134-135.

[37] 1933 년 제정된 후 <통일안>이 2 차 수정을 거쳤다. 제 1 차 수정은 1937 년에 진행되었는데 1936 년 <사정한 조선말 표준어 모음>에 따라 통일안의 용어와 어례(語例)는 표준어로 바꾸게 되었고 내용 수정 내용은 없었다. 제 2 차 수정은 1940 년에 진행되었는데 ‘마춤법’은 ‘맞춤법’으로 바꾸게 되었고 사이시옷이 쓰이기로 개정되었다. 김민수(1973),『 國語政策論(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p 236 참조.

[38] 이상혁(2015),『<한글간소화방안>과 표음주의, 그 국어학사의 굴절 - 형태주의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4 (2015): 35, p36.

과서 편집 등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공용문서나 국정 교과서에서, 한글은 다 <통일안>에 따라 사용된 것이었다. 즉, 해방이 된 후, 한국에서 조선어학회는, 문교부를 대신, 명실상부한 어문 정책 담당자가 되었다.[39]

1950 년대 초반에 정경해(鄭暻海)로 대표되는 박승빈 학통을 계승한 표음주의학파 학자들이 식민지 시기에 진행했던 한글 맞춤법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고자 시도하였지만 1933 년 <통일안>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조선어학회를 언어 민족주의 집단으로, 그들의 활동을 한글을 매개로 진행한 항일운동, 또는 민족독립운동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해방 후의 한국 사람들에게 표음주의와 형태주의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나 더 정확하냐는 문제는 전후(戰後) 언어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저항적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한글학회를 지지하고 선호하는 것이 결국 당연한 일이었다. 해방 후의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문화는 반드시 구 식민주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표음주의 학자들은 민중들이 원하는 식민통치에 관한 기억의 해소 및 <통일안> 뒤에서 서 있는 민족 정체성의 힘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해방 이후 한글간소화파동까지, 언어 정책의 담당자는 국가가 아닌 학자로 구성된 한 그룹인 특수한 시절이 있었고, 한글학회는 실제적으로 한국의 언어 정책을 담당하게 된 적이 있다.

---

[39] 조선어학회는 8·15 광복과 더불어 부활되었다. 1949 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어학회에 의해 제정된 <통일안>(1933)은 이런 과정을 겪은 후 과학적인 철자법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제 3 장 한글간소화파동

제 1 절 한국전쟁 이전 한글 간소화 논의의 기원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였다. 문화의 독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 년 10 월 9 일에 법률 제 6 호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담화를 발표했고 앞으로의 한글간소화파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문을 쓰는데 한글이라는 방식으로 순편(順便)한 말을 불편케 하든지 속기할 수 있는 것을 더디게 만들어서 획과 음을 중첩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한글 초대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글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니 이 점에 깊이 재고를 요하여 여러 가지로 교정을 하여서 우리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40]

현행 국문의 철자법이 복잡해서 간편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속마음은 파악될 수 있는 담화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글 간소화를 권고하는 취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듬해 한글날 담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한번 철자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

[40] "한글날을 맞이하여"(1948.10.09),『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p271, 공보실 편, 1953

"근래에 이르러 신문게재나 다른 문화사회에서 정식국문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이전 것을 개량하는 대신, 도리어 쓰기도 더디고 보기도 괴상하게 만들어놓아 퇴보된 글을 통용하게 되었으니, 이때에 이것을 교정하지 못하면 얼마 후에는 그 습관이 더욱 굳어져서 고치기 곤란할 것이매 모든 언론기관과 문화계에서 특별히 주의하여 속히 개정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전에 쓰던 것과 지금 새로 쓰는 것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눈으로 보기 쉽고 입으로 부르기 좋고 또 손으로 쓰기 속한가 누구나 지금 것이 이전 것만 못한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41]

이승만 대통령이 보다 강한 어조로 현행 철자법의 퇴보성 및 간소화의 시급성을 밝혔다. 1949 년 11 월 27 일 이승만 대통령이 '쉬운 한글을 쓰도록 하자'는 담화를 발표하여 재차 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현재 신문에 쓰는 소위 한글이라는 것은 내가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읽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더디며 보기도 좋지 않으니, 이왕에 쓰던 바와 같이 자모음에 따라서 숙련하도록 취음하여 쓰며, 오직 원글자에 뿌리 되는 글자만 찾아서 쓰는 것이 국문을 창조한 원측이요, 또 국문을 이용하여 문명 발전을 속히 하자는 본의이니, 이대로 하여가면 그 중에서 차차 발전되어 개량과 교정이 점점 자라나갈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나는 전적

[41] "한글사용에 관하여" (1949.10.09)

으로 주장하는 바이다."[42]

이승만 대통령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현행 한글철자법은 한국 문명 발전에 "공연한 장애물"로 비판했고 "이전 구한말에 쓰던 법대로 고칠 것"은 옳다고 강조했다.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철자법 변경하자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1950 년 2 월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단 회견에서 '잇다'와 '있다'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소용없는 ㅅ을 둘씩이나 쓰는 '있다'를 받침으로 쓰고 있으니 문화가 진보되지 않는다"[43]며 현행철자법에 대해 불만 및 한글철자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날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선 정부만이라도 자기 뜻대로 시행하겠다."라고[44] 언명까지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현행철자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6·25 전쟁으로 잠시 끊기게 되었다. 그런데 1950 년 12 월 28 일에, 전쟁 상태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문교부장관에게 문서를 보내서 "이전 주자(鑄字)를 만들어 간편한 받침법을 곧 실시"[45]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쟁 당시에 본격

---

[42] "쉬운 한글 쓰도록 하자"(1949.11.27),『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 p272-273, 공보실 편, 1953

[43] 오영섭(2003),『1950 년대 전반 한글파동의 전개와 성격』, 사학연구(72),p148

[44] 허만길(1994),『현대한국어 정책 연구』,p87,국학자료원

[45] 대통령비서실, 『한글철자 개정에 관한 건』, 1950. 12. 28. 정부기록보존소 URL:http://www.archives.go.kr/gars/search/president_seboo.asp.

적으로 이승만의 뜻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이를 통하여 이승만의 한글철자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1953-1955 년 한글 간소화 파동

강제적인 수단으로 통과된 발췌개헌안과 미국의 불간섭 입장으로, 1952 년 8 월 5 일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제 2 대 대통령을 연임했다. 6·25 전쟁이 종결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치 기반도 확정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3 년에 이르러 한글 간소화 추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53 년 4 월 11 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을 강조하여 현행철자법이 하도 어려운 탓에 1948 에 제정한 '한글 전용에 대한 법률'이 실효를 못 얻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공문과 신문 등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46].

1953 년 4 월 27 일 백두진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 및 도지사에게 호령을 내렸다. 소리 나는 대로 한글 맞춤법을 쓰자고 하는 〈정부의 문서와 교과서 등에 현행 철자법을 폐지하고 구식 기음법(記音法)을 사용〉이 국무총리 훈령 제 8 호로 공포되었다.[47] 이 호령은 한글간소화파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

[46] 『한글의 투쟁』,경향신문 1953. 04. 13.

[47] 고길섶,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도서출판 앨피. 2005.

"우리 한글은 철자법이 복잡 불편하니, 교과서, 타이프라이터에 대하여는 준비상 관계로 다소 지연되더라도, 정부용 문서에 관하여는 즉시 간이한 구 철자법을 사용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오니, 이후 의차 시행하기 훈령함."[48]

백두진 국무총리는 제8호령을 통하여 당장 공문에서 간이한 "구 철자법"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승만이 몇 차례 담화에서 고집했고 급기야 국무총리 제 8 호령에서 명확히 지적하는 이 "구 철자법"은 무엇일까? 구 철자법이란 1900 년 전후에는 신구약 성경의 표기법이다. 그 시기의 성경식 철자법은 표음식과 표의식 철자가 섞여서 널리 통용 되고 있었다. 이 대통령 역시 그 철자법대로 공부했고, 미국 생활에서도 이어져 그때 익혔던 구성경식 철자법을 계속 사용했다.

국민의 호응이 없이 통과되는 제 8 호령은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을 일으켰다.

5 월 9 일, "전국 문화 단체 총련합회"가 반대 성명서가 발표했고 정부가 언어문화에 대한 무모를 규탄했다. 문총에서는 현행 한글맞춤법을 "갑자기 폐지한다 함은, 천추에 남을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고를 했다. 언학계에서 이 지시는 "언어의 생명을 말살한 소치"라고 정부측의 언어문화에 대한 무모를 규탄하였다. 교육계에서도 이런 정부에서 학문에 대한 간섭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49]

---

[48] 유제한(1955),『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한글, (111), p94

[49] 『현행철자법폐지불가!』,동아일보, 1953.05.14

한편, 현행 철자법을 폐지하는 결정에 대해, 당시의 문교부도 의의가 있었다. 현행 맞춤법 폐지를 반대하는 논쟁으로 한글간소화가 부진 상태로 빠지고 있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에서 철자법 개정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학자를 비롯하여 사계권위자가 모였다. 심의한 결과는 현행 철자법에 가장 옳고 정확한 것이라는 이유로 문교부로서는 현행철자법을 계속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때 문교부에서 제8호령이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대 의견은 이승만 정부와 불일치한 입장은 주목된다.[50]

문화 측면의 비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정치 절차의 부당성으로 인한 분노까지 밝히게 된 것이다. 아주 소수의 인사들이 느낀 한글의 난해성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취급되었다는 것부터 틀렸다"[51]는 언론계의 비판도 보였다. 말과 글과 같은 전 민족적인 중대사를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부의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지시하였다니[52]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불가피하게 가세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강행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변화시키려 하고 민중의 반응과 정치의 절차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이런 독단적인 정치행태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반 사회의 언론이 비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

50 『맞춤법폐지훈령에의의 문교부도반대』,경향신문, 1953.05.12

51 『현행철자법폐지불가!』,동아일보, 1953.05.14

52 『철자법에 대하여』,경향신문, 1953.05.14

드디어 제 8 호령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5 월 22 일 국회에서는 김봉재, 엄상섭 등 97 명 의원의 연명으로 "교육용어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현행 통일안이 가장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용어는 현재 문교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에 의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53] 5 월 23 일 국회문교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직접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그 경위를 듣기로 하였다. 허증수(許增秀) 문교부차관은, 현행 철자법 폐지는 공문서에만 국한하고 교육 용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54] 국회의 이런 냉담한 반응은 사실상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듯이다. 즉, 국회에서는 백두진 총리의 <제 8 호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반응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고 대항하고자 한 것이다.

국회와 여론에서 이승만 정부의 한글간소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문교부는 "국어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어냈다. 5 월 27 일과 28 일, 이틀 시간을 거쳐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지만, 40 일쯤 후인 7 월 7 일, 이 규정이 문교부령 제 31 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 50 명의 구성원 명단도 공포되었다.

한글을 간소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국어심의회는 10 월 1 일에 오후 2 시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강당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다.[55] 두 달 만에 "현행 한글 맞춤법은 더 이상 간이화 할 수 없고, 만일 더 나아간다면 한

---

[53] 김윤경. 『한글학회와 한글운동의 역사』, p23

[54] 조선일보 1953. 5. 26.

[55] 『한글간소에 주안,일일치대서 국어심의회개막』,경향신문, 1953.10.02

글을 풀어 가로 쓰는 수밖에 없다"하며[56], 한글분위에서 심의한 결과는 박종화 문총회장이 제안한 '한글풀어 가로 쓰기 안'이 국어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57]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대통령의 뜻에 안 맞는 '한글풀어 가로 쓰기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954 년 1 월 21 일에는 최현배가 문교부 편수국장을 사임하였고, 2 월 9 일에는 김법린이 민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문교장관 사임하였다.

각계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2 월 24 일에 백두진 국무총리가 "한글간소화를 단행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정부의 간소화 의지를 재강조했다. 백총리는 한글 분위의 심의결과인 "가로풀어쓰기안"에 대해 교육계출판계문화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를 밝히고 "한글간소화를 단행할 사람을 새로운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냈다.[58] 이어서 3 월 27 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금 '국문에 대하여' 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전에 우리 국문학자들이 임시로 교정해서 철주 자판을 만들어서 신구약과 기타 국문서에 쓰던 방식을 따라서만 국문을 쓰게 할 것이고 각 신문에서도 문명에서도 문명 발전이 촉진되기 위해서 이것을 다 포기하되 이 글 공포 후 석달 안에 교정해서 써야 할 것이다.

---

[56]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한글, (111), p94.

[57] 『"풀어쓰기안"을채택 한글분위 2 개월간결산』,동아일보, 1953.12.31

[58] 『한글간소화단행 신장관은추진자를임명』,동아일보, 1954.02.25

...(중략)

타국인이 저의 나라말을 배기 쉽게 하는데 한인은 아직도 태고적 생각을 변치 못하고 예전 습관만 주장해서 국문 신문은 하나도 없고 국문으로 쓴다는 것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문명진보로 알고 지켜 나가고 있으니 한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냐고 하면 타락 퇴보한 백성의 대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59]

이번 담화의 내용에서 이승만이 문맹퇴치 및 문명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로 현행철자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총리 제 8 호령에서 언급한 "구 철자법"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관한 답도 드디어 이번 담화를 통해 정확히 알려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한글철자법은 바로 "신구약과 기타 국문서에 쓰던 방식"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학자들이 토의한 결과를 무시하며, 민중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한글간소화를 추진시키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한 것이다. 이승만의 고집은 각계각층의 더 거세한 거부와 반대를 초래했을 뿐이다.

3 월 30 일 국회에서 한글간소화 문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양수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석달 안에" 실행 가능여부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백 국무총리는 답변을 피하고 허증수 문교부차관은 "문교행

[59] "국문에 대하여"(1954.03.27),『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p237-239, 공보실 편, 1956

정이 맡아보고 있는 자로서 당연히 상부의 명령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성경에 기재된 철자법대로 한다면 여러가지 혼란이 있고 학생과 선생들 간에 익숙치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되 그 것을 토대로 해서 한글의 간소화를 기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60]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반대 여론에 더욱 불씨를 던졌다.

현행철자법을 폐기하고 3 개 월 안에 구성경식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교과서의 개편문제, 전국 국어 교원의 재교육 문제, 진행중인 제정위원회의 노력이 낭비될 문제, 인쇄소에 옛성경식 맞춤법의 활자가 없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한글간소화에 기한부는 난처한 지경이다.[61]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주류 신문도 계속 각계각층의 반대글을 게재했고 그 중에 학생, 학자, 출협회회장, 종교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월 18 일, 한글학회가 총회를 열어 한글간소화 방안을 반대하는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승만의 이런 권력에 의한 문화 개정은 "천만부당"이고 민중의 뜻을 무시하는 강행은 "민주정신에 위반"이라고 강경하게 지적했다. [62] 낮은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무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이다.

이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선근을 신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했다. 4 월 22 일 신임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기자들을 회견하여 한글간소화를 단행하

---

[60] 『어제"한글문제"국회에서질의』,동아일보, 1954.04.01

[61] 경향신문,1954.04.02;『한글간소화에기한부는난처』,동아일보, 1954.04.01

[62] 『권력에의한개정은천만부당 반대불구강행은 민주성신의위반』,동아일보, 1954.04.20

겠다고 말했고 개인적으로는 간소화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63]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이런 입장은 역시 전에 "한글간소화를 단행할 사람을 새로운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백 총리의 말과 일치한 것이다. 이선근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사학과에 공부했고 유명한 역사학자였다. 당시 단국대학교학장과 자유당훈련부장을 맡고 있었고 친일파 인물이었다. 이선근의 발언에서 그 분이 이승만과 같은 철자법 취향을 갖고 있었고 권력지향적 인물로 추측된다.[64]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취임 및 발언은 정부에서 한글간소화의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다. 5 월 1 일, 이선근 장관은 한글간소화에 대한 3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째, 한글간소화는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재천명한 것이다. 둘째, 구미 각국의 예를 보면, 철자에 대한 간이화는 역행할 수 없는 대세다. 셋째, 현행 맞춤법은 너무 무법주의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대량 과학적인 검토를 필요하겠다고 말하였다.[65] 5 월 29 일 백두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문교부에서 이미 한글 간소화 안이 성안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불원실시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엔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한글간소화에 대해 아직 연구검토 중이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하였다. 문교부측 근로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성안은 커녕 각계의 의견을 검토 중이고 가장 논의의 초점은 "쌍받침" 문

---

[63] 『한글간소화단행하겠다 이신문교장관은기자회견서언급』,동아일보, 1954.04.24

[64] 오영섭(2003),『1950 년대 전반 한글파동의 전개와 성격』, 사학연구(72),p157

[65] 『문법에 치우친 점기』,동아일보, 1954.05.02

제이며 아직 성안의 단계까지는 요원하다고 한다.[66] 문교부당국의 태도는 백 총리의 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6 월 19 일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한글간소화 방안이 성안되었다고 정식 언명을 했다. "쌍받침" 문제에 대해 문교부에서 전폐를 시사하였다. 3 월 27 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3 개월내로 구성경식 철자법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5 월 29 일에 이선근 장관은 3 개월이라는 기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삼개월"이라는 기한부내로 성안이 되었다.[67] 문교부와 정부 간 간소화에 관한 인지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하게 된 뜻이다.

6 월 25 일 이선근 장관이 한글 간소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이고 26 일 오전 8 시 30 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간소화 방안에 대해 일부 설명을 진행했다. 26 일 오전 11 시 30 분에 이선근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간소화 방안의 3 원칙을 발표했다.[68]

一, 받침은 끝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 사용하던 바침 가운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 등 10 개만을 허용한다. 다만, 받침으로 사용된 때의 'ㅅ'의 음가는 'ㄷ'의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ㄷ'은 받침으로 아니 쓴다.

---

66 『한글간소화전도요원』,동아일보, 1954.06.01

67 『한글간소화드디어성안』,동아일보, 1954.06.20

68 『삼원칙에입족 국회로상정』,경향신문, 1954.06.27

二,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原詞 또는 語源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三,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않거나 또는 말이 바뀌어진 것은 그 변천된 대로 적는다.[69]

이 3 원칙은 공포된 후 전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계, 언어학계 그리고 문화계에서 많은 학술적인 비판을 가했다. (一)항은 불필요한 쌍받침을 없애겠다는 조항인데 이선근 장관의 예시는 자세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어 보인다는 점, (二)항은 용언의 어간 어미는 밝히되, 어원은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앉았다"를 "안젔다"로 쓴다고 모호한 설명만 했다는 점, (三)항은 현재 많이 변해있는 표준말을 새로 제정하라는 내용인데 이 장관의 예시에선 달라진 표준말과 새말을 혼돈하여 설명해서 혼란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비판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간소화 같은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야말로 행정적인 조치를 이용하여 실시되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언론도 벌어졌다. 교육자 조동식 씨(趙東植氏)는 "학자들의 의견을 넓게 종합하여 학계의 여론을 기반으로 했다면 행정조치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완곡한 말투로 정부에게 학자들의 역할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강사 김모 씨가 이런 문제는 문화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행정 조치로 대처하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밝혔

[69] 문교・공보의 맞춤법 간소화 공동안. 한글 학회 50 돌 기념사업회 편. 정재환(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p48. 재인용.

다.[70] 즉,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언어 질서를 담당하는 것을 인정 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선근 장관은 취임한 후에 한글간소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어심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문교부 관계자들과 협의 없이 비밀리에 이 안을 작성한 것이다.[71] 혹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행정적 조치로 공포될 지, 공포 이전 일반 학계나 문화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 보였다. 이승만 정부가 한글간소화에 관한 행동은 문화 자유에 대한 말살이자 민주 정신에 어긋남으로 해석되어서 한글간소화 사건은 점점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다.

7 월 2 일, 경무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선근 장관이 극비밀 속 작성한 "한글간소화 방안"을 상정하여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다.[72] 7 월 3 일 10 시 갈홍기 공보처장의 입회하에 문교부와 공보처의 공동 명의로 이 안을 정식 발표했다. 이 날엔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공문서에서 일제히 한글을 쓰자는 지시도 내렸다. [73] 7 월 7 일,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학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학계 자체 내에서 물의가 있을 때는 구미선진국가들의 예로 보면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다고 하며 행정부로서 한글철자개혁 단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추진 기세로 기자가 제출한 간소화문제를 응답

---

[70] 『"행정조칙"은어찌되나?』,경향신문, 1954.07.01

[71]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한글, (111), p95.

[72] 『한글간소안국무회의통과』,경향신문, 1954.07.03

[73] 『공문은한글전용 이대통령각의서유시』,동아일보, 1954.07.05

했다.[74]

학계에 보다 지대한 파문을 던졌다. 7 월 7 일 한글학회가 간소화 방안을 무원칙, 무체계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빨리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어학조교수인 사무엘 E 마틴(Samuel E Martin)이 문교부 장관에게 공개장을 보냈습니다. 공개장에서 이번 맞춤법 개혁이 앞으로 발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데 있어서 간소화 방안의 실행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행정조치가 내리기 전에 정부에서 학자의 역할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첨부했다.[75] 7 월 8 일 오후 연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에서 "맞춤법간소화 방안의 비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76] 이로써 한글간소화문제가 더 분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학계의 종종 반대 의견을 비웃는 듯이 간소화 방안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7 월 9 일,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간소화 방안의 세부적인 이유편을 발표했다. [77] 그 다음 날에 정례기자단 회견석상에서 신임 국무총리 변영태는[78]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한 다음에 쌍받침은 필요없으며 현행 발음대로 한글을 써야 옳다고 말했고 한글간소화는 "정부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필요"하겠다고 주장했다.[79] 정부가 간소화를 단행

---

[74] 『학계의반대불구 한글간소화방안을단행 이문교장관 태도표명』,동아일보, 1954.07.08

[75] 『문교장관에 보내는공개장 표기원칙에배치』,경향신문, 1954.07.10

[76] 『한글간소화비판』,경향신문, 1954.07.10

[77] 『한글간이화의 이유 문교부발표』,동아일보, 1954.07.10

[78] 백두진 국무총리는 1954 년 6 월 18 일 사임했고, 1954 년 6 월 27 일에 변영태가 후임으로 취임했다.

[79] 『간소화는 필요 변총리한글문제담』,경향신문, 1954.07.11

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하고 학계의 의견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해 보인 것은 확인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문교부의 3 원칙 및 이유편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간소화의 필요성과 간편함을 설명하고 언중들을 설득하려고 한 모양이었지만, 간소화 방안의 허점과 이장관 설명의 결함으로 인해 학계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다. 당시 한국에서 사회 대다수는 한글간소화 방안을 인정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서울대학신문사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철자법 지지하는 비율은 92%인 반면, 정부 안 지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반의 지지를 얻기는 커녕 절대다수는 정부 반대의 입장이다.[80] 학술적으로 간소화 방안에 대한 비판은 학술적으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반대 이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민주"라는 반대 이유도 종종 보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간소화 방안은 국민 다수로부터 통렬히 비판을 받게 되어도 당연한 결과다.

한글간소화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맹퇴치하도록 하는 목표에서 전개하게 되었는데, 점점 사회 각계에 파문을 던졌다. 국회에서 이 한글간소화 방안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고 원내에서 각파의 의견도 분분했다. 국회와 이승만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갈등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갈수록 단순한 언어문제, 학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점도 시선을 끌고 있었다.

7 월 8 일 오후, 송방용 의원 외 12 명 의원들이 한글간소화 문제를 국회

[80] 조선일보, 1954.11.06

에서 처리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날에 민주국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반대했고, 무소속동지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당국의 한글간소화 처사는 부당하다고 우선 학계의 권위자의 의견을 듣도록 11일 공청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9일 본회의에서 긴급동의안을 채택하며 민주국민당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승만 출신인 자유당 내에서도 "부당하다"고 하는 비판이 비등하였던 혼란한 상황이었다.[81]

10일 20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선근 장관이 출석하고 최순주 부의장이 사회하여 질의가 시작되었다. 송방용, 박순석, 서동진, 윤제술, 이철승 의원 등이 이구동성으로, "전문 학자들의 올바른 주장을 억누르고, 온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민족 문화의 위협을 주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고 공박하였다.[82] 이에 대해 이선근 장관은 앞으로 문교부에서는 상설적인 국어심의회를 만들고 간소화 방안을 심의 검토할 것이라고 승낙하는 동시에 행정조치로 말하면 선진국가 프랑스와 터키, 그리고 일본에서다 그런 예가 있으므로 정부 측에 행정력을 남용하겠다는 의사는 없지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83]

이선근 장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자유당 소속 손문경 의원이 질의를 종결하자는 의견을 말하고 여당의원들이 동의하였다. 여당이 온 토론종결전술을 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게 되어 야당의원들이 이 제안을 반대를 했

---

[81] 『국회서도수문제화 물의분분해진한글간소화방안』,경향신문, 1954.07.10

[82]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한글, (111), p97.

[83] 국회, 『국회사 : 019 회(임시회) 20 호』, p13-14, 국회사무처, 1954. 6. 9.~1955. 2. 10.

다. “개원이래 최초의 일대혼란”[84]을 일으켰고 12 일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기로 결의했고 산회하였다.

12 일 오후 21 차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훈 부의장의 사회하에 질의가 개최되었다. 정재완, 정중섭, 이인, 조순, 김상돈, 천세기, 장택상, 김홍식, 윤형남 등 16 명 의원들이 정부안을 신랄히 비판하고 문교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형남, 김상돈 의원 등이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선근 장관은 “수일 전 북한괴뢰들이 방송할 때 사용한 말과 같다.” 고 비난을 했고, 장내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결국 자유당의 박순석 의원 외 9 인이 “한글간소화 안은 정부와 국회와 문교부위원회, 학술원으로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중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그 대책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자.”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85] 또, 정부측과 좌우 당이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간소화 방안을 독단 천행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 보류하기로 종결하였다.[86] 이로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은 일단락을 지었다. 국회의 개입으로 한글간소화 문제는 옳은 절차로 해결될 전망인 것 같았다.

그러나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상의하기로 가결된 국회의 결정은 구성도 못해본 채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7 월 13 일 이승만 대통령이 공보처를 통하여 간소화문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강행할 것

---

[84] 『민의원 한글문제심각화』,동아일보, 1954.07.11

[85] 『철회할생각없는가?국회서 한글문제로물의비등』,경향신문, 1954.07.13

[86] 『한글간소화와 이대통령담화』,동아일보, 1954.07.15

을” 시사했다.

“…지금에 내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 지금 소위 현행철자법이란 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나의 의견으로 주장하려는 바는 이법이 우리나라 문명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을 정지 시키자는 것이니 이 문법을 고집하는 분들 외에는 대다수 민중인 것이다.

…

그러니 우선 정부측에서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실시하라는 것이므로 가장 단순해서 쓰기도 쉽고 또 타자를 치기에도 용이하며 외국인으로서 우리 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내에 문자를 묻는 사람들이 국어를 배울 때도 신속하고 쉽게 만들려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오해할 일이 없는 것이다.” [87]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현행철자법을 폐지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만이 다시금 현행 철자법은 한국의 문명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라 비난하고 독자적으로 관공서부터 한글간소화를 단행하라고 말하였다. 7 월 12 일 국회 내 여야의 치열한 설전 끝에 결의한 한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성명서로 인하여 아무 대책 없이 정부 간소화 방안대로 수긍할 모양이었다. 이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결의, 그리고 자유당의 자가결정까지 모두 물리치면서 한글간소화 방안을 강행시키려는 기세였다. 이승만의 행동은 또

[87] 『이대통령한글문제에강경태도』,동아일보, 1954.07.14

다시 국민의 커다란 의구심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나온 날에 국어국문학회에서는 이 방안 중 간소화이유편을 비판하는 반박문을 발표하였고[88], 다음 날에 간소화절대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89] 동아일보에서 실었던 "이러한 일 또한 입헌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차라리 의심하고 싶다"[90]라고 풍자하는 사설 내용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비등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7 월 16 일, 이승만 대통령의 강행 담화에 이어, 자유당 중앙당부에서는 문교부안을 절대 지지하는 성명서를 공포했고 다시금 전국적인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 이 성명서는 자유당 의원부와는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의원 중 문교부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대다수이고 중앙당부 독단적인 방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있었다.[91] 뿐만 아니라, 이 지지 성명서가 난리를 일으킨 또 하나의 이유는, 안에서 "과거에 김두봉 일파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조작한 한글을 강요하는 북한 공산도배들은 이제 와서 이극로 일파를 동원하여 파괴적인 문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92]는 내용도 들어있다. 수일 이전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북한괴뢰들이 방송할 때 사용한 말과 같

---

88 『간소화이유편반박(상)』,동아일보, 1954.07.15

89 『40 년전과유사』,경향신문, 1954.07.15

90 『한글간소화와 이대통령담화』,동아일보, 1954.07.15

91 『한글간색화강행호』,동아일보, 1954.07.20

92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한글, (111), p99.

다” 라는 실언을 이어 재차 간소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용공(容共)”이라는 죄명을 지으려고 한 듯이다.

북한의 어문 발전에 있는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위에 언급된 김두봉과 이극로이다.

김두봉(金枓奉)은 조선 민족어 연구의 선각자였던 주시경에서 전수받아 조선어를 연구하였다. 그는 조선어 연구에 깊은 소양을 쌓았고, 조선어 연구에서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는 동안에도 민족어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1922 년 상하이의 새글집사에서 30 만 이상의 한글 단어가 수록된 <깁더조선말본(精解朝鮮語文典)>을 출판했다. 김두봉은 점차 문화운동만으로는 민족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문화운동을 넘어서 사회주의 사상 운동 전선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이제 조선어 연구나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 독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김두봉이 김양수를 통해 이극로에게 보낸 전언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갓 조선어문의 연구 또는 사전편찬은 민족운동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연구의 결과, 정리 통일된 조선어문을 널리 조선 민족에 선전, 보급함으로써, 처음으로 조선 고유문화의 유지 발전, 민족의식의 배양도 기할 수 있으며 조선 독립의 실력 양성도 가능한 것이니 다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침으로 진행하라.”[93]

[93] 한홍구(2010), 『김두봉 - 혁명가가 된 한글학자』, 한국사 시민강좌, 47 (일조각, 2010), p 217~218

1927 년 후, 김두봉은 한글학자가 아닌 혁명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는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당시 공산주의 활동보다는 반일 투쟁을 해온 민족독립운동가로 평가받았다. 광복을 맞아 1945 년 12 월 독립 동맹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반일 애국 활동의 업적과 유명한 조선어학자로 지위와 명성을 얻고 공인을 받았다. 해방 후에 김일성보다 나이가 많은 조선어학자 김두봉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초대 총장 등 요직을 맡게 되었다.[94] 김두봉은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출판한 <깁더조선말본> 대신 남한에 있는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을 추천하였다. 이것은 그가 이극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남북간 언어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기 방지하고자 한 노력이다.

"나라가 두 쪽이 나더라도 말까지 두 쪽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사전 편찬이 시급한데 쓸 만한 학자가 없습니다. 남쪽에는 최현배 선생만 있어도 되니 당신이 북쪽으로 와주십시오."[95]

이극로는 유명한 민족주의 한글학자이다. 그는 중국 및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 제국주의를 대항하고 조선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한 한글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이극로는 조

---

[94] 심지연(1993), 『金枓奉硏究－잊혀진 革命家의 肖像』, 인간사랑, 1993, p58-66

[95] 이상각,(2013),『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유리창, 2013, p 229.

선어연구회에 가입하였다. 조선어연구회에서 완성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어 표준어 모음>(1936),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1) 등 작업, 그리고 우리말사전 편찬에 이극로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96] 1948 년 김두봉이 보낸 북한의 사전 편찬 사업이 이극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편지 내용에 호응하여 이극로가 남북협상을 위해 북방으로 가서 북한에서 체류하였고 북한의 어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두봉과 이극로는 둘 다 항일 투쟁 활동가와 조선어 학자 이 두가지 신분으로 알려진다. 특히 광복 후 김두봉은 북한에 남았고 북한의 최고권력자 일선까지 올라가 한때 김일성과 경쟁 관계였다. 김두봉이 북한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이유는 그가 북한 민족주의와 북방 공산주의의 완벽한 결합의 상징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유당에서 김두봉과 이극로 일파를 언급한 것은 간소화 반대 의사를 지니는 인사들을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로 공박하고 간소화 방안을 정당화시키려 한 것이다. 자유당에서 이런 의도가 뻔한 움직임은 오히려 거듭 큰 소동을 일으켰다.

같은 날에 정부에서는 "한글개정철자법심의회"의 경비로 234 만 환을 예비비중에서 긴급지출할 것을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경비는 정부의 간소화 방안에 의거한 한글의 보급 및 강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97] 정부측에서 굳센 간소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다시금 드러

---

[96] 박용규,(2014), 『이극로 : 조선어학회를 이끌어가며 언어독립투쟁을 전개하다』, <조선어학회 33 인>, 역사공간, 2014, p 33-36.

[97] 『보급강습비긴급지출』,동아일보, 1954.07.20

난다.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들은 행정부 당국이나 자유당에서 학문의 자유, 문화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취향을 어긋난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7 월 21 일, 재경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문교부의 간소화 방안을 반대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간소화 방안에서 표기체로서의 손실을 들고 간소화 방안이 체계가 없다고 비판하며 실시 방법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갈 공보처장도 성명을 하였다. 갈 공보처장은 "자가의 이설만을 고집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시대적인 요청을 무시하며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간소화 방안 반대자들한테 고압적인 말투로 경고하였다.[98] 하지만 한글 간소화 문제로 인한 혼선이 여전히 이루고 있다. 문교부에 반대 진정서들이 답지하여 하루 30 통이 넘게 건의 반대 진정서가 날라 들어왔다.[99]

7 월 24 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방문하러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현행한글맞춤법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이 한글의 이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습관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말하였다.[100]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지배적인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 살짝 양보한 듯하지만 "정부와 단체"

---

98 『한글문제일익파란』,동아일보, 1954.07.23

99 『한글간소화 그뒤동태』,동아일보, 1954.07.23

100 『한글은임의사용』,경향신문, 1954.07.25

는 먼저 문교부의 방안에 의거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101] 이런 입장은 이승만이 7 월 13 일 발표했던 특별담화에 보였던 입장과 비해 변함없이 여전하다.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 것을 비추어 본다면 이는 특별대책위원회의 재검토 결의를 무시하고 정부의 방안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거듭 각계각층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7 월 12 일 민의원 제 21 차 본회의에서 정부, 국회 문교위원회, 학술원 삼자가 합쳐서 '한글 간소화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내렸다. 이에 이어, 7 월 20 일에, 국회문교부과위원장 김법린, 학술원 회원 최규남, 그리고 문교부 장관 이선근 3 명이 모여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여 한글간소화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관 설치에 관해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한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에 따라 국회 · 정부 · 학술원 3 자가 합쳐 각기 대표 위원 3 명을 선발하기로 합의되었다.[102]

여기서 언급한 학술원은 1954 년 5 월 26 일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회원의 임명재가를 얻음으로서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어 6 월 12 일에 제 1 회 학술원 총회를 소집케 되었던 단체이다.[103] 학술원 회원 이병도 씨에 의하면 학술원은 "실질에 있어서는 학문의 직접적인 연구기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학술 향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수시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 건의하는 과학자의 최고기관"[104]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

101 『정부와단체가먼저실시』,동아일보, 1954.07.25

102 『심의기관논의』,동아일보, 1954.07.23

103 『학술원정식발족』,동아일보, 1954.06.02

104 『학술원의진로』,조선일보, 1954.07.26

특별대책원원회를 설치하고 간소화문제를 재검토해라는 결정이 나온 후, 대중은 대한민국 최고 문화기관인 학술원을 쳐다보며 학술원에게 "학자적 양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105]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7월 28일에 국회에서 결정된 "한글대책심의회" 구성에 따라 학술원에서 이에 참가할 대표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2차 총회를 열었고, 일부 회원으로부터 정부 간소화 방안에 대한 심의는 곧 정부의 방안에 따라달라는 결과가 나오면 학술원의 위신을 떨어지게 만들까봐 대표 선출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 장면으로 학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간파할 수 있다. 결국 국회의 요청에 이어 학술원에서 무기명투표로 최현배 · 이숭녕 · 양주동 삼 씨가 결정되었다.[106] 그런데 학술원 50명 회원 중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 수는 20명에 불과했다. 출석하지 않았던 회원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기세를 보고 "무사태평주의"로 일관했다. 또한, 회의에서 학술원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질의에 사회자 최규남 부회장은 자꾸 애매한 대답으로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일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느낌으로 간파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학술원에 대해 기대하던 일이 허사가 될 듯하여 대중도 실망하였다. "그들에 대한 깨끗한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107]는 강하게 질타하는 기사 내용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105 『혼선일으킨한글문제』,경향신문, 1954.07.27

106 『학술원서대표삼명선출』,조선일보, 1954.07.30. 최현배(崔鉉培) 씨는 한글학회 이사장이고, 이숭녕(李崇寧) 씨는 문리대학교 교수이고, 양주동(梁柱東) 씨는 동국대학교 교수이다.

107 『임비된학자양심』,동아일보, 1954.07.30.

8 월 2 일, 한글특별대책위원회는 첫 회합을 갖게 되었다. 국회측에는 표량문 · 손문경 · 정중섭, 정부측에는 허증수 · 안용백 · 최석주, 학술원측에는 최현배 · 이숭녕, 그리고 김법린 위원장과 이선근 장관 등 총 11 명이 모여서 한글 간소화 방안 실시 절차만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는 앞으로 간소화에 대한 모든 표결에 있어 정부 · 국회 · 학술원 측 각 1 표씩으로 제한되었다는 결의이다. 별다른 성과는 이번 집회에서 거두지 못하였다.[108]

8 월 9 일 한글특별대책위원회 제 2 차 회합에서[109] 국어에 관한 일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새로이 "국어심의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 년 7 월 김법린 전 문교부장관이 문교부통 제 31 호에 의해 발족한 국어심의회는 해소되었다.[110] 8 월 17 일 한글특별대책위원회 제 3 차 회합에서 새로운 국어심의회 구성과 성격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의 토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첫째, 국어심의회는 항구적인 정부기관으로 존속하고 어문 연구를 심의하기 위한 번안을 통과 · 공포한다고 결의되었다는 것; 둘째,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정부 · 국회 · 학술원에서 각각 동수효비율로 정부가 이들을 임명한다는 것이다.[111] 주목할 만한 것은, 1953

---

108 『표결은각파일표로제한』,동아일보, 1954.08.04. 『첫날은 절차만토의』,조선일보, 1954.08.04. 허증수(許增秀) 씨는 문교부차관이고, 안용백(安龍伯) 씨는 문교부국장이고, 최석주(崔錫柱) 씨는 공보처 처장이다. 학술원측 대표는 최현배 · 이숭녕 · 양주동 3 명인데 양주동 씨가 그 날에 병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109 조선일보는 "한글특별대책위원회"에서 8 월 9 일의 회합은 "제 1 차정식 회합"으로 정의했는데, 경향신문 및 동아일보 등 신문은 8 월 2 일의 회합은 첫 회합을 정의한다. 필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경향신문 및 동아일보에 따라 기술했다.

110 『새로국어심의회설치』,조선일보, 1954.08.11.『국어심의회상설』,경향신문, 1954.08.11.

111 『국어심의회의 성격문제토의』,조선일보, 1954.08.19

년 설립된 국어심의회는 아무런 행정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글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토의를 신중하게 진행해봤지만 결국은 현행의 "통일안"으로 돌아가버렸고, 이승만 정부의 무시를 당하고 말았다. 이 결의에서 나왔듯이 정부는 여전히 국어심의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새롭게 설치하게 된 국어심의회는 역시 과거와 같이 유명무실 될 지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어심의회는 한글 문제에 있어서 결의권을 가져야말로 설치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3 개월을 걸치며 11 월 16 일 한글 대책위원회는 제 9 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어심의회에 결의권 부여 문제로 난항 중에 있었다. 7 차와 8 차 회합에서 모두 국어 심의회 성격 규정에 대해 토의했는데 9 차 회합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것으로 이에 결의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심의회에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112] 바라던 국어심의회 결의권을 못 얻을 경우 "심의회"는 정부에 존속한 자문기관만으로 구성되고 한국의 국어 문제에 있어 권력이 제한되고 약화될 것이다.

1954 년이 11 월 중순 후 한글특별대책위원에서 더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글간소화 파동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어 1955 년 상반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1955 년 9 월에야 이승만의 담화로 해소되었다.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문화상 중대한 변경이 된 것은 국문을 쓰는 법을 모두 다 고쳐서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며 간단한 것을 복잡

112 『국어심의회성격은?』, 동아일보, 1954.11.22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을 고치려고 내가 여러 번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이제와 보니 국문을 어렵고 복잡하게 쓰는 것이 벌써 습관이 돼서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이며 ... 이것을 가지고 이 이상 더 문제삼지 않겠고 민중들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자유에 부치고자 하는 바이다."[113]

1955 년 9 월 19 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로 오랫동안 파문을 일으켜오던 한글간소화파동은 종막이 내렸다.

제 3 절 한글 간소화의 실패

역사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 정책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대중은 항상 좀 더 간단한 표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간소화는 문자개혁의 필수적인 절차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방안은 도대체 왜 한국에서 실행되지 못했을까?

1954 년 총무처에서 <한글간소화 방안(원칙이익편)>의 서론 부분에 "새로 정리된 그 어문 체계는 유감스럽게도 지나친 규범의 폐를 입었고 또한 우리 겨레의 고유한 음운 구조를 고려치 않은 것이어서 누구나 배우고 쓰기에 불편을 느껴왔던 것이다. 이제 이점을 고려하여 현행 한글 철자법을 실용의 편의와 학리성의 이유와 그리고 문자에 대한 역사적 미감을 살리어 다음 三개 조항에 의하여 간이화하기로 한다."[114]다는 내용이 들어

---

113 『민중이원하는대로하라 이대통령 한글문제에중대담화』, 동아일보, 1955.09.20

114 국무회의록, 1954, 한글간소화방안(원칙이익편)(제 33 회)

간다. 이 것은 이승만 정부가 간소화 방안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공식 설명인 셈이다.

이승만 정부의 포인트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현행 맞춤법의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고 배우기 쉬워서 문맹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인쇄 및 타자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국가 근대화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맹퇴치 및 생산력 증진 이 두 가지 근대화 국가가 이루기 위한 과제는 이승만 정부의 요점이다.

그 "三개 조항"은 쉽게 정리해보자면, 받침을 10 받침만(ㄱㄴㄷㄹㅁㅂㅅㅇㄹㅁㅂ)을 사용하자는 조항, 원사 및 어원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항, 변한 대로 표준어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115]

당시의 국어학자들도 간소화 방안 결함을 지적하였다. 1 항은 단순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받침이 제한된 조항은 글자의 표의성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 지적사항이다. 현행 맞춤법에도 중의성 문제가 있는 글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간소화 방안에 의하면 중의성 글자가 많아지며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전체 문맥을 잘 파악해야 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 교육에 오히려 보다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2 항은 1 항과 모순될 수 있는 조항이다. 간소화 안 2 항에 따르면 명사 "높이"는 '높다'에서 온 단어인데 원사를 밝히지 않고 그저 "노피"로 적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 항 제한된 받침의 규칙에 따르면 받침 "ㅍ"은 폐기되어서 "높다"는 "놉다"로 쓸 것인데 "높이"는 "노피"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간소화 방안 대로 하면

[115] 국무회의록, 1954, 한글간소화방안(원칙이익편)(제 33 회)

국민의 문화 생활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다. [116]

본고 2 장 내용을 대조하면, 이승만 정부에서 주장했던 방안은 바로 일제시기 총독부가 1912 년에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 년에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와 비슷한 표기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글을 형태주의에서 표음주의로 전환시키고자 한 규정이다.

하지만 일제시기 하에 일제 총독부가 표음주의 표기법을 주도했으나 표음주의 표기법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조선 국어학자들과 검토한 후 형태주의를 일부 수용하여 1930 년에 <언문철자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제강점기에 표기법에 관한 형태주의 대 표음주의 논쟁은 결국 형태주의 표기법의 승리로 끝난 점이다. 즉, 일제강점기에 표음주의의 한계가 이미 지적되었고 한글 표기법의 역사적 지향은 형태주의 표기법이다.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했던 형태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안>(1933 년)을 부정한 한글 간소화 방안의 근본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한 조치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한글 간소화 방안은 현행 맞춤법에 비해 보다 편리하고, 국가의 현대화할 문화적 건설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사회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인증을 구하도록 노렸지만 실패했다. 이승만이 제안한 간소화 방안은 당시기준으로 50 년 전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

[116] 정재환(2006),『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52.

1933 년 이후 통일안대로 사용해 온 국민들에게 이런 간소화는 결코 편리하지 않았다.

학술성이 떨어지고 역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방안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근대화 이루기 위한 한글 간소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역근대화" 성격을 띤 것이다. 이 것은 역사의 흐름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한글 간소화 안이 가져올 문화 퇴보와 사회 혼란상에 대해 극히 걱정하여 호되게 비판과 반대를 하였다. 한글 간소화 방안이 다만 소수 표음주의 철자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찬성을 얻었을 뿐이다.[117]

[117] 정경해와 서상덕 등은 정부가 제시한 간소화방안의 3 원칙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이견이 있었지만 표음주의 철자법을 토대로 한 한글간소화방안을 지지하고 공감하였다.

4 장 한글 간소화 정책의 정치성

제 1 절 이승만의 반공정책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는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캐리어로 보일 수 있다. 일상소통에서 진행되는 대화이든 서면에서 쓰이는 문자이든, 언어란 도구는 어느 한 단체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문화를 구별하려면 언어는 한 좋은 방식이다. 즉, 언어는 한 사람의 "문화 신분"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신분은 한 문화 단체에 속하는 멤버들이 자신의 신분, 즉, 문화적 소속감에 대한 인정이다. 한 사회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그 같은 언어는 이 단체의 문화 신분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어서, 언어는 문화 신분의 중요한 요소이고 상징이다. 또는, 언어는 한 문화단체가 자신들의 과거나 역사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속한 문화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똑같은 언어를 통하여 인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력, 사회적 존재감, 그리고 역사적 연속성을 얻을 수 있다. 만일 한 문화단체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신분의 존재에 대해 협박 당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쓰기에 고집하겠고 필사적으로 지키곤 한다.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사는지에 따라 만들어진 언어도 다르다. 헤르더(Johann Gotfried Herder)가 <언어의 기원에 대하여>에서 언어는 각종 사물 및 사건과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 서로 결합된 혼합체[118]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그 특정한 환경에서 살

[118] Johann Gotfried Herder 저, Yao Xiaoping 역,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1772) , Commercial Press. 1998.

다가 잘 쓰는 언어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그가 속한 단체에 대해 깊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글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를 위해 일하는 도구이다. 글은 언어를 쓰고 표기하는 기호 체계로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통일된 것이다. 그러나 글과 언어는 차이점이 있다. 글은 사회의 탄생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글은 맨 처음 생겼을 때부터 통치 계층과 소수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독점된 것이고, 언어처럼 누구나 다 할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글의 활용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글의 제작도 계급사회에서 일정한 계급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은 피할 수 없고, 전반의 사회 생산과 문화 수준의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글은 사람의 뜻에 따라 옮기지 않아 자연스레 탄생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수 인사가 정리하거나 창조해내고 정권이 규범을 정해준 다음에 교육을 통하여 일부 사람들이 습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 글자는 정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언어, 글자에 대해 집착한다. 통일된 언어는 자연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추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단체에서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생긴 후, 지식 엘리트 계층은 언어를 기획하여 최대 범위 내에서 언어정책이나 언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보급한다. 집권자와 엘리트 층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는 국민 교육이나 기타 행정조치를 통해 '국어'로서 근대국가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 이어서 집권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 언어의 전체 사용자에 대한 정치 통합을 완성할 수 있다.

Kaplan 과 Baldaulf[119]에 의하면, “ 언어정책이란 인류사회 단체에서 어느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관점에 대해서 만들어낸 법률, 규정 그리고 조치들이다.” Chen Zhangtai 는 언어 정책은 일정한 정치의 구현이자 한 나라의 국가 총 정책의 일부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120] 이런 언어 학자들이 언어 정책에 대해 내린 정의에서 뚜렷한 특징은 국가나 정부에 관한 정치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많이 사용된다. 언어 정책은 언어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정치와 섞여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가 만일 언어를 변화시키려면 이런 행동은 언어만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의식을 바꾸고 언어 동질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행동이다.

이런 측면에 입각하면, 이승만이 한글 간소화 방안을 단행하려는 의도는 쉽게 문맹퇴치에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가 간소화라는 언어정책에 어떤 정치적 의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 제 3 장에서 서술했듯이,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북한괴뢰들이 방송할 때 사용한 말과 같다”라는 실언에 이어, 1954 년 7 월에 자유당 중앙당사에서 간소화 방안을 절대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글을 김두봉 일파가 조직한 산물로 정의하고 한글 간소화 방안에 대한 비난은 북한의 파괴적인 문화공세라고 선언하였다.[121] 이 것은 간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용공

---

[119] Robert B. Kaplan,& Richard B. Baldauf. <Language planning from practice to theory.> Multilingual Matters, 1997.

[120] 陈章太，《语言规划研究》，2005. p148

[121] 유제한(1955), 『6·25 사변 이후 한글 학회의 걸어온 길(2)』 ,한글, (111), p99.

(容共)”이라는 죄명을 짓고 나서 간소화 방안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뻔한 움직임이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 배경도 고려하면 이승만이 갖고 있는 반공 정책과 동 시기에 공산권 국가의 언어 정책 동향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단 건국 후 남북 막론하여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문맹퇴치이다. 레닝은 "문맹자는 정치 밖에 서 있는 존재"라고 지적하는 말은 건국 단계인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문맹퇴치는 국민 형성에 있는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건설에 자격 있는 공민(교육을 받은 자)이 형성되어야 국가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정치적인 대립 중에 교육은 훨씬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946 년 5 월 8 일 제 1 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이전의 연합 국가 간의 협조 관계가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고, 모스크바 3 상회의의 결정으로 수립할 조선임시정부의 불투명해진 전망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이 소위 민주개혁을 본격화 하였다. 하지만 개혁 중 북한의 성인 인구 중 문맹률이 거의 90%가 된 것은 문제가 되었다. 거의 230 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문맹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당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선전되기 어렵고, 민주개혁 및 경제발전계획도 순조롭게 실행되기 힘든 것이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 정세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1954 년 5 월 24 일에 김일성은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가 회의에서 현재 조선의 싸움은 무장적인 싸움이 아니라 선전적 말과 글의 싸움이라고 제기하며, 문화인·예술인·선전원에게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글로 선전할 것을 요구하였다.[122] 이어서 11 월 25 일에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 3 차 확대위원회에서 지금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문맹퇴치 운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게기하였다.[123] 이 제안을 토대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문맹퇴치운동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것을 결정하여 결정 제 113 호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1946 년 12 월부터 1949 년 3 월까지 적극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하였다.

1946～1949 년도 북한 문맹퇴치자 수

년도	문맹퇴치자 수
1946 년	320,000 명
1947 년	848,865 명
1948 년	1,210,268 명
1949 년	193,838 명
누계	2, 572,971 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간행『교원신문』1949 년 8 월 25 일자 2 면, (단, 1949 년도는 4/1 분기만 포함됨)[124]

---

[122] 김일성, (1946 년 5 월 24 일), 북조선 각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가 회의에서진술한 연설 ,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p59-61.

[123] 김일성, 북조선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의 길 , 평양 : 민주조선출판사, 1947, p156.

[124] 문맹퇴치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파악한 총 문맹자 수는 230 만 여명이었으나. 1949 년도까지의 전체 누계 문맹퇴치자 수는 2,572,971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문맹퇴치자의 수가 처음 계획한 숫자보다 27 만여 명이 늘어난 데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 가운데 문맹자에 대한 교육과, 재문맹자에 대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이주환(2005) "1945 ~ 1949

대중들의 문화 수준에 맞고자 하여, 특히 노동자 농민 여자들이 사회주의 문화적 건설 중의 속도를 보다 빠르게 높이기 위해, 문자 도구에 대한 개조는 특히 중요하다.

문맹퇴치운동에서 큰 역할을 발휘했던 한 조치는 한자폐지이다. 1949 년 3 월에 북한에서 모든 출판물과 국가공문서들에서 한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규명하여 "동아시아에서 완벽하게 한자의 폐지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125] 이 조치는 북한 언어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

한자 폐지 이외에 북한에서 표기법 개조하는 데도 많은 시도와 노력이 보였다.

해방 후 3 년쯤에 남북한은 언어 규범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기법은 남북 다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했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을 규범으로 삼고 있었다. 1947 년 북한에서 조선어문학회가 설치되면서 1948 년 전후하여 <조선어 신철자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남북 사이에 표기법에 차이가 초래되었다.[126]

주시경의 언어 이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김두봉은, 조선어 학회의 <통일안>을 비판, 재검토하는데서 출발했다고 하며, 보다 강화된 형태주의 철자법 원칙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문자 개혁을 펼치고 따로 철자법을 제정할 필요를 가리켰다. 당시 북한의 어문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25 (2005): 339-68. p365.

[125] 고영진, (2006),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言語文化, 9-2.

[126] 고영근, (1989), 『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의 말과 글(북한의 인식 7)』, 을유문화사, p13

있는 김두봉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접수하여 반영한 것은 북한에서 발표한 <조선어 신철자법>이다. <조선어 신철자법>은 김두봉의 문자개혁의 강한 의지를 포함하면서 극단적인 형태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로 삼으로써 불가피하게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는 내용까지 나왔다.[127] 반모음을 표기하기 위한 '1'와 불규칙 용언을 규칙 용언으로 표기하기 위한 'ㄹ, ㅎ, △, ㅸ, ㅂ' 등 새로 만든 새 글자 6 개이다. [128] <조선어 신철자법>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었다. 당시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인 『조선어 연구 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소개되었다. 1949 년 조선어문연구회에서 북한의 규범 문법서로 제정한 <조선어 문법>에서는 <조선어신철자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철자법>은 광범위하게 실시되지 못했다.[129]

1948 년 <조선어신철자법>에서는 6 개 신 문자의 도입 이외에도 "남북 언어 이질화의 상징적인 사례"[130]로 여겨지고 있는 한자어 두음법칙의 폐기, 사이시옷의 폐기, 절음부(')의 채용 등 규정이 확정되었다.

---

127 이승옥,(1990),『북한 철자법의 체계와 변천』,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105

128 『조선어신철자법(朝鮮語新綴字法)』, 조선어문연구회 ,평양: 조선어문연구회,1948. <조선어신철자법>에서 <통일안>(1933) 규범과 차이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조선어 신철자법'이 한자어 첫소리에서 'ㄹ, ㄴ'을 밝혀 적는다든지, 사잇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절음부(絶音符) ' ' '를 사용한다든지, 신문자 6 개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든지 하는 점들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을 계승하고 있는 남한의 한글맞춤법과 차이 나는 점들이다. 절음부 ' ' '는 합성어 사이에서 '위'말'과 '겹'이불'에서처럼 절음부 '''를 사용한 것으로, 1966 년 『조선말 규범집』에서부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선어신철자법(朝鮮語新綴字法)) 인용.

129 Ross King,『Language, Politics, and Ideology』,p124. Michael Kim,(2017), 『The Han' gŭl Crisis and Language Standardization: Clashing Orthographic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22, Number 1, Spring 2017, p25 재인용.

130 임경화『붉은 한글운동'의 기원: 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 Han'guk Munhwa (Seoul, Korea) 73 (2016): 179-206. p203.

북한의 문맹퇴치 운동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민을 내부 체계화 만드는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사람들을 국민 교육을 통하여 다시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어낸 계기이기도 한다.

북한이 한자 폐지 등 언어 정책을 통하여 문맹퇴치에 성과를 거두어서 공산권에 속한 중국에서도 역시 문자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13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도 문자개혁파가 존재하였지만 마오쩌동은 문자개혁에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문맹퇴치와 교육보급운동의 시급성으로 한자에 대해 개혁할 필요가 각계각층에게 느껴졌다.[132]

공산권에서 이뤄진 개혁은 이승만에겐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문맹퇴치를 이루기 위한 성인 교육의 보급 및 교육 시스템의 정비 과제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한발 앞섰다. 이 것은 일단 미군정청 문교부장 고문을 역임한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박사(영어: Horace Horton Underwood, 한국어: 원한경(元漢慶))의 경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1] 동시기에 베트남에서도 문맹퇴치를 위하여 한자폐지가 확정되었다.

[132] 1952 년 2 월 5 일,중국문자개혁연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문자개혁이 이로써 정부가 이끌고 추진하는 단계로 나섰다. 1954 년 10 월에 져우언라이의 제의 및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승인에 따라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나타났고 연구와 실시 이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1954 년 11 월에 정부가 전 국민을 동원하여 한자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추진시켰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폭넓은 대중 토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있어 엄청 중요시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1955 년 류사오치가 한자 간소화가 야길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소화는 차례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1956 년부터 1959 년까지 국무원의 결의에 따라, 간소화된 한자는 4 차로 나눠서 시행되었다. 간소화된 한자는 공장 노동자, 농민, 병사 등 대중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간화자는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규범화된 글자로 사용되고 있다. 王爱云, (2014), 『当代中国文字改革研究(A study on the written language reform in the P.R.C)』, p 78-103, 참조.

"만약 조선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조선인은 일본 소련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중략) 남한의 교육 방책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 관념에서 거의 또는 전면 이탈된 조선 민족주의의 대두일 것이다."[133]

교육기회 확장 및 성공한 문맹퇴치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체계 경쟁에서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관건이다. 성인 교육 보급, 문맹퇴치, 교육체계 정돈에 있어서 한발 앞선 북한, 그리고 언어 근대화를 이루고자 해서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공산권 국가(베트남, 중국) 들로 인하여 이승만은 피할 수 없이 압력을 받게 되었다.

냉전 체제 하에 구성된 굳센 반공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이승만이 김두봉, 이극로 일파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승만 입장에서 한글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묻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승만이 김두봉과 이극로 일파가 많이 기여한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쓴 한글에 대한 무력화 시도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한글 간소화 논쟁이 공론화 된 후 이승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한글간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용공(容共)"이라는 죄명을 부여하고 간소화 방안에 정당성을 만드는 의도도 분명했다.

<한글 간소화 방안>은 문맹률이 높았던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국

133 『남한교육방책을 비난-문교부 언더우드 박사 피력』, 자유신문, 1947.10.01. 이혜령(2007), 『언어 법제화의 내셔널리즘—1950 년대 한글간소화파동 一考』, 대동문화연구 12.58 (2007):p189-190. 재인용.

민에게 보다 간단한 한글 표기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한 순수한 어문정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이 시기에 남북은 다 자신의 세력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문맹퇴치 사업을 추진함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국가에서 언어의 힘, 어문 정책의 본질적인 의도, 그리고 글자의 정치적인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정책 결정과정의 일방성 문제

한글 간소화 파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현행 철자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행정의 힘에 의존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그의 시도는 진일보하게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승만의 간소화 방안은 일방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이 것은 역시 이승만 정부의 정치 노선의 특징과 일치하다. 3 장에서 이미 서술한 듯이 1954 년 하순으로 들어간 후 정부에서 한글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려는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 한글 간소화 파동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어 1955 년 상반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1954 년에 만든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승만 정부의 통치 노선 및 이런 특수한 시점을 감수하면 1954 년에 일어난 사사오입 개헌 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췌개헌안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집권을 이루고자 하여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통령의 3 선 금지조항을 없애려는 개헌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치계 인사들의 우려가 종종 있었다. 1954 년 1 월 23 일 자유당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조항 개헌안을 2 대 국회 막판에 제출하였다. 경제조항에만 국한된 내용이라서 국회의원들은 방념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제기했던 이 경제조항 개헌안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관측 기구(氣球)에 불과했다"[134].

1954 년의 5.20 선거는 처음부터 개헌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삼은 듯했다. 자유당은 전국에서 개헌추진 국민대회를 열어 개헌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초대대통령 종신집정제를 비롯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발의권, 국회의원 소환제, 국체 변혁에 관한 국민투표제,정부의 대민의원 해산제 등 5 개 항목의 개헌 공작이 추진되고 있었다.[135]

이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자유당에서 많은 탄압을 당했다. 어떤 선거구에는 입후보등록도 못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136]

---

134 윤길중, 조영규, 진형하, 김갑수, 이석제, 김문룡, 김효전. (2016). 改憲秘史. 동아법학, (72), 171-392.p221

135 『오개항의 개헌안추진설』, 조선일보, 1954.03.24

136 그 대표적인 예로 자유당의 제2인자 이기붕(李起鵬)이 출마한 서대문 을구에서는 조봉암(曺奉岩)이 입후보 단계에서 등록방해를 당했다. 조봉암은 100 명 이상을 필요로 하는 추천장을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서류를 제출했으나 거의 같은 시각에 추천인이 추천을 취소한다는 신고를 해오곤 했다. 조봉암 측이 다른 유권자의 추천장을 보충해서 받아 가면 다시 추천취소가 들어와 끝내 추천장 심사에서 실격이 되고 말았다. 조봉암은 부산 을구와 인천 을구에 등록을 하려했으나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등록서류를 탈취당해 아무데서도 출마를 못했다.『국회사』.

선거 결과 자유당은 114 석을 차지하여 공인 당선자 99 명과 비공인 당선자 15 명을 당선시켰다. 개헌에 재적 3 분의 2, 즉 136 명이 필요하다. 자유당이 목표한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 자유당은 136 명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무소속 포섭 공작에 나섰다. 회유는 주로 이권을 약속하는 방식이었고, 협박은 선거사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식이었다. 6 월 20 일에 무리한 방법으로 무소속을 포섭한 자유당은 드디어 136 명을 채웠다.

9 월 8 일 개헌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했다. 9 월 6 일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재적 203 명 중 3 분의 2 를 초과한 136 명의 이름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 월 27 일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당일 재적의원 203 명 중, 찬성 135 표, 반대 60 표, 기권 7 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하여 의사봉을 내려쳤다.

그러나 자유당 장경근 의원이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대안으로 냈다. 장경근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수학자 최윤식(崔允植) 박사(당시 서울대 문리대 교수, 대한수학회장)와 이원철(李源喆) 박사(당시 인하공대 학장)에게 자문까지 구했다. "재적의원 중 2/3 가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재적의원 203 명의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는 136 명인데 203 의 2/3 은 135.33…이라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을 하면 135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11 월 30 일 제 91 차 본회의에서 최순주 부의장이 지난 27 일 제 90 차 회의 중에서 발표했던 개헌안 부결은 정족수의 계산상 착오로써 취소하겠다

고 선포하였다.

한국 국내의 불만 뿐만 아니라, 이해 12 월에 발표된 뉴욕 타임즈 지를 비롯한 미국 신문들도 기사를 실어 이승만 정부를 신랄한 비판으로 규탄하였다.

12 월 6 일 자유당의 손권배(孫權培) 의원이 탈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2 월 9 일 김영삼 · 김재황 · 김재곤 · 김홍식 · 성원경 · 신정호 · 신태권 · 민관식 · 한동석 · 현석호 · 황남팔 · 이태용 등 12 명 의원들도 탈당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후 야당과 자유당 탈당자들은 민주당을 결성하였다.

그래도 이승만은 아무런 회개의 뜻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소원대로 1956 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다.

1954 년 하순에 들어, 개헌한을 통과시키고 재선하게 만드는 것은 이승만의 종신집정제에 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므로 한글간소화 방안은 가결 미결 상태로 두게 되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중앙집권주의적인 색채가 유달리 강한”[137] 자유당 정권이 일방적인 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잡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는 특징을 진일보하게 선보이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일방성은 그가 20 년 된 <통일안>을 폐기하고 50 년 전의 구성경식 표기법으로 되돌라는 반민중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

[137] 박태균,(2012),『이승만 정부 시기 관료조직의 형성과 그 특징』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2012): 503.

를 내리게 만들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사회 전반과 직결된 이런 결정은, 결코 지도층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하면 안되고 민의에 따라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해 민심의 수요와 비전을 반영해야 한 것이다. 간소화 파동 사건은 오히려 그 반대에 서 있었다.

문자를 개혁할 때, 문자와 사회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자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를 단지 언어 기호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승만이 국민 습관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벗어나 한글은 당장 자신의 의지대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 자체가 현실과 떨어진 환상이다.

<통일안>은 이미 한국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가 형성되어서 문자 개혁은 더욱 점진적이고 국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난폭하게 다루어서는 실패하기 마련이었다.

제 5 장 결론

이승만 정권 시기의 한글간소화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기한 맞춤법 개정으로 인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맞춤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국민의 언어 생활은 물론, 전 사회에 큰 불편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면 일단 한글 맞춤법 표기의 정립과정부터 알아야 한다. 철자법에 관한 표음주의 및 형태주의의 논쟁은 한반도에서 계속 존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기로 하여 많은 시도를 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일제가 의도했던 어문통제의 일환일 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어학회가 국어 통일을 위해 국어 운동에 나섰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국어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은 민족정신을 품는 대표적인 문화단체가 되었다. 조선어학회에 의해 제정된 <통일안>(1933)은 반식민통치투쟁과 민족독립운동의 성과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방 후 자연스레 과학적인 철자법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1948 년 10 월 9 일,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으로 한글간소화파동의 서막을 예고했다. 남북전쟁이 잠잠해지고 1953 년 4 월 27 일 백두진 국무총리가 총리 제 8 호령을 발표하여 온 나라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해외에 오래 머무는 이승만이 익숙한 맞춤법은 당시 기준으로 50 년 전의 구성경식 맞춤법이고 국내에서 보급된 1933 년 <통일안>에 잘 쓰지 못했다. 이승만이

추진하려고 한 <한글간소화 방안>은 바로 50년 전의 맞춤법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통일안>(1933)은 이미 국내 공교육을 통하여 점차 정착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내린 한글 간소화 지시는 전 국민의 언어생활, 문자 생활에 많은 혼란상을 야기시켰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은 정치 파동으로도 이어졌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 국회, 학술원 공동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안의 영향으로 간소화 방안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그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언어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항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작업은 완성했다. 이런 시스템은 민주적 절차를 밟고, 전문성 지니는 학자 그룹인 학술원의 참여도 있어서 공인되었다. 결국 1955년 이승만이 담화로 한글간소화파동 사건 종료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국어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만든 이유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체제에 있어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 우월성 경쟁 및 그의 정책 결정과정의 일방성이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간소화 방안을 강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안은 역(逆)근대화이기 때문이다.

한글 간소화 방안이 강행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승만의 표기법에 대한 인식이 과학성이 부족하고 낙후되었다. 한글을 간소화 시키려는 것은 이승만의 일방적인 견해에서 출발한 것이고 민중들의 수요가 아니다. 학술성이 떨어지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방안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한글 간소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역근대화” 성격을 띈 것이라서 강행되지 못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충실하지 못했다. 각 단계 철자법은 수립과정을 간략히 서술하였지만 상세한 규정 내용 및 언어적 과학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한글간소화파 이후 한글 학회의 동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총무처에서의 한글간소화 방안에 관한 자료를 구했지만 문교부에서 간소화 방안을 작성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캐내지 못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필자도 많은 생각을 들었다. 필자가 논문 연구를 시작한 후에 주변 한국 친구들한테도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 사건을 몰랐다고 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자주 쓰는 유행어를 보면 오히려 간소화된 한글과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다.

학술의 독립성에 대한 추구와, 현대 민주국가에서 언어와 문자 뒤에 빠질 수 없는 정치적 성격, 이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대한 문화 개혁은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의 우열, 그리고 개혁 후의 결과는 모두 학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전공학자는 이를 과학적인 문제로 다루어 개혁과 개혁하지 않는 결과를 논의하며, 전문성 견해를 천명하고, 정치인이 이를 실행할까 말까를 논의하게 만들어야겠다. 행정조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처럼 권력을 남용하여 일방적인 견해와 반동을 바탕으로 한 문화 개혁 강행은 피해야 한다. 행정의 힘을 빌어서 문화와 학술을 촉진시키는것과 학술의 자유를 존중하

는 사이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기간행물・인터넷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한글>, 한글 학회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대통령비서실, 「한글철자 개정에 관한 건」, 1950. 12. 28. 정부기록보 존소 http://www.archives.go.kr/gars/search/president_seboo.a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

-단행분

국립국어연구원(2000), 『국립국어연구원 10 년사』

국회, 『국회사 : 019 회(임시회), 국회사무처, 1954. 6. 9.~1955. 2. 10』

김민수(1973),『 國語政策論(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실록』,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 웅진씽크빅

박용규,(2014),『이극로 : 조선어학회를 이끌어가며 언어독립투쟁을 전개하다』, <조선어학회 33 인>, 역사공간, 2014

심지연(1993), 『金科奉研究－잊혀진 革命家의 肖像』, 인간사랑, 1993

Johann Gotfried Herder 저, Yao Xiaoping 역,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1772) , Commercial Press. 1998.

Ulbæk, Ib (1998). James R Hurford; Michael Studdert-Kennedy; Chris Knight (eds.). The origin of language and cognition. Approaches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 social and cognitive base.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이혜령. "언어 법제화의 내셔널리즘—1950 년대 한글간소화파동 一考." 대동문화연구 12.58 (2007): 183-224.

오영섭. "1950 년대 전반 한글파동의 전개와 성격." 사학연구 72 (2003): 133-74.

정재환,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오응환, 「한글간소화 파문」,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 광화문출판사, 1962.

정재환. "왜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간소화 파동을 일으켰나." Naeil Eul Yeo'neun Yeogsa 32 (2008): 108-17.

이상혁. "국어학과 표음주의, 그 국어학사의 굴절 - 형태주의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4 (2015): 35.

王爱云,（2014）,『当代中国文字改革研究(A study on the written language reform in the P.R.C)』

Michael Kim,(2017), 『The Han'gŭl Crisis and Language Standardization: Clashing Orthographic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22, Number 1, Spring 2017

이승욱,(1991),『북한 철자법의 체계와 변천』, 동아연구 22 (1991): 103.

이승옥,(1990),『북한 철자법의 체계와 변천』,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이상각,(2013),『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유리창, 2013

한홍구,(2010), 『김두봉 - 혁명가가 된 한글학자』, 한국사 시민강좌, 47 (일조각, 2010)

이택선,(2012),『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형성과정(1945-50 년)』

Robert B. Kaplan,& Richard B. Baldauf. <Language planning from practice to theory.> Multilingual Matters, 1997.

陈章太, 《语言规划研究》, 2005.

박노자,(2004),『계몽주의자, 군국주의자!』,한겨레 21(제 502 호)

송미영,(2019),『어문 규범으로 보는 음운 현상의 표기 반영 양상』,어문연구,47.2 (2019): 47

이강언,(1981),『국어 표기법에 있어서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갈등』, 어문학교육 4 (1981)

김윤경,(1933),『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18): 최근의 한글운동』, 동광 (40 호)

이상혁,(2013),『<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권 1 과 <언문철자법>(1912)- 조선어 학습 방침과 규범 통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 호

임동현(2014). 『1930 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94 , 2014

이상혁(2015),『<한글간소화 방안>과 표음주의, 그 국어학사의 굴절 - 형태주의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4 (2015): 35

장신(2016),『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과 민족서사의 탄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53 , 2016

전택부,(2008) 『[다시 보는 새가정] 일제탄압과 한글의 투쟁 - 조선어학회 사건』, 새가정 , 2008

임경화,(2016),『'붉은 한글운동'의 기원: 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 Han'guk Munhwa (Seoul, Korea) 73 (2016): 179-206.

윤길중, 조영규, 진형하, 김갑수, 이석제, 김문룡, 김효전. (2016). 『改憲秘史』. 동아법학, (72), 171-392

고영근, (1989), 『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의 말과 글(북한의 인식 7)』, 을유문화사

고영진, (2006),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言語文化, 2006

이주환,(2005) "1945 ~ 1949 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25 (2005): 339-68

임경화,(2016),『붉은 한글운동'의 기원: 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 Han'guk Munhwa (Seoul, Korea) 73 (2016): 179-206

박태균,(2012),『이승만 정부 시기 관료조직의 형성과 그 특징』 한국행정학

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2012): 503.

Abstract

An Analysis on the Hangeul Simplification Policy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in the 1950s

Dai Wei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Hangeul simplification policy that took place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in the 1950s in South Korea. The Hangeul simplification shock w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orthography raised by President Syngman Rhee. This incident is a complex incident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history,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attempt to unilaterally enforce spelling has brought great inconvenience to the whole society as well as the language life of the whole country.

To understand this case in-depth, the process of the Korean orthography establishment should be understood first. The debate between phonemicism and morphism over the spelling rule continued to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ny attempts were made to unify the Korean spelling with the Academic Affairs Bureau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is movement was, in the end, only part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intended language control. Against this backgroun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launched a Korean language mov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Due to the incident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ecame a representative cultural organization bearing the national spirit that was oppres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to preserve the Korean language. The Unification Plan (1933), established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as widely accepted as a scientific spelling rule after liberation, in a symbolic meaning of the achievements of the anti-colonial struggle and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On October 9, 1948, President Syngman Rhee announced the prelude to the simplification of Hangeul through a discourse. On April 27, 1953, Prime Minister Baek Doo-jin announced the 8th Prime Minister's decree, causing great repercussions throughout the country. Syngman Rhee, who stayed abroad for a long time, was familiar with the spelling rule used in the Bible in Korea 50 years ago and was not familiar with the 1933 Unification Plan which was popular in Korea. The <Korean Simplification Policy> that Syngman Rhee tried to promote was an attempt to restore the spelling 50 years ago. The Unification Plan (1933) had already been gradually settled

through public education in Korea, and Syngman Rhee's instructions for Hangeul simplification caused much confusion in the language and text life of the whole people. The government's unilateral action also led to political turmoil. Eventually,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solve this problem by forming a special countermeasure committee jointly with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cademic institute. However, the Korean simplification policy remained unsolv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1954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Meanwhile, the work of establishing a permanent decision-making system for the legitimacy and legitimacy of languag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has been completed. Such a system was recognized as a result of democratic procedure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academic institute, a group of scholars with expertise. Eventually, in 1955, Syngman Rhee officially declared the end of the Hangul Simplification Policy.

As a result of the thesis,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at political factors had a lot of influence on the reason why President Syngman Rhee, who was not a Korean language scholar, tried to make this language policy happen. Especially in the Cold War system, it is considered to have worked a lot that the competition for ideological superior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One-sidedness in his decision proces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simplification policy was not enforced successfully is that this policy is reverse modernization.

Key Word: Syngman Rhee, Hangeul,Orthography, Language Policy, Morphological orthography, Phoneticism, Anti-communist policy

Student Number: 2018-22059